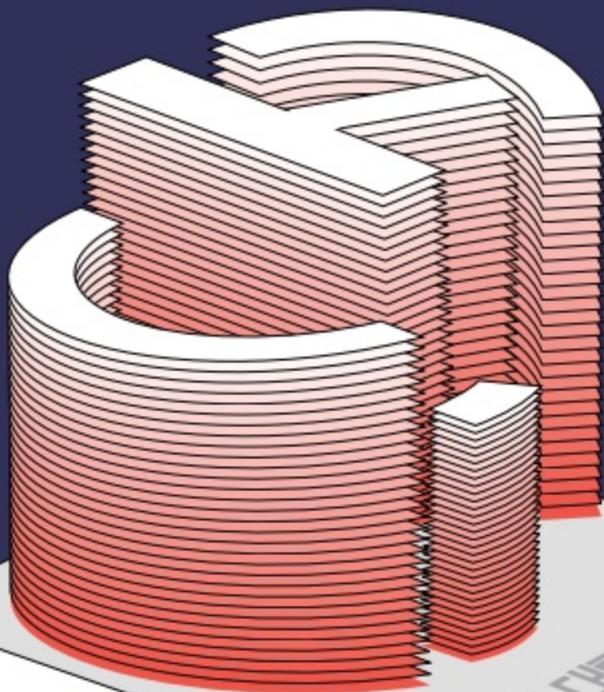


제20대 대선보도 평가 토론회 및 간담회

2022. 4. 28(목) 14: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부 대선보도 평가와 모니터링 혁신

사회 최영목 성공회대학교 교수(민언련 이사)

주제발표	대선보도 모니터링 평가와 혁신 -대선미디어감시연대 활동 중심으로 송경재 상지대학교 교수	p.3
	시민의 선거보도감시 역사와 모니터링활동 김수정 중앙대학교 강사	p.20
	충북지역 대선보도, 무엇을 남겼나 이수희 충북민언련 대표	p.33
	경남지역 언론, 제20대 대선 어떻게 보도했나 노희승 경남민언련 사무국장	p.39

토론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김현 광주전남민언련 사무국장 /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2부 선거보도 모니터보고서를 ‘모니터’하다

사회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토론 김효신 KBS 기자(시사프로그램 ‘추적’, 前 ‘질문하는 기자들’)
 정철운 미디어오늘 기자 / 윤수현 미디어스 기자
 김고은 기자협회보 기자 / 김양원 YTN 편성국장(열린라디오 YTN 진행)
 강연섭 MBC 기자(前 언론노조 MBC본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
 장세인 PD저널 기자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대선보도 모니터링 평가와 혁신 ‘대선미디어감시연대’ 활동 중심으로

송경재(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민언련 정책위원)

1.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

미디어(언론)는 현대사회에서 정부기구 중 제4부(the forth branch of government)에 해당할 정도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중요한 소임을 수행한다. 언론이 현대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인구 증가에 따라 매일 다양한 지방이나 세력들 간의 복잡해진 상호관계 속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새로운 사건을 보도해 사회 전체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미디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표현의 자유 기관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신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신정현 2005, 385). 일반적으로 언론의 기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첫째, 사실(fact)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기능이며, 둘째, 국민의 정치의식을 형성하거나 공중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산업사회와 달리 정부를 비롯해 거의 모든 정치적·사회적 주체가 사회적 의제를 선택하고 논의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조향제 2011, 239).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최전성기 위대한 정치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Perikles)는 민주주의를 “정치권력이 소수에게 있지 않고, 다수의 사람에게 있는 제도”로 지칭하고 다수의 사람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가 정착한 영토가 넓고 국민의 수가 많은 국민국가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퇴조하고 이른바 대표에게 위임하여 통치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Heywood 2014).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의 대의민주주의 정착은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확인해준다. 이 과정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민주주의라는 정체가 작동, 운영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다. 미디어의 정치적 역할은 선거 국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선거과정 자체도 민주적이어야, 민주적 권력 창출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가 강조한 바와 같이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는 책임감 있는 시민이 모두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치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적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형식적이고 투표에 한정되는 참여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언론은 정치권과 유권자인 시민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권혁남 2006, 390). 언론은 정치매개집단으로써 정치로부터 소외된 시민을 정치과정의 주인으로 재정립하여 참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듯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는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시민들이 올바른 정치정보를 파악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 대표를 선출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은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선거와 언론의 관계는 이렇게 사회의 핵심적 요소이다(박주현 2022).

최근에는 이른바 ‘미디어 선거’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언론은 유용한 선거정보를 제공해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또는 유권자와 유권자의 선거 정보가 직접적인 전달 방식이 아니라 언론에 의해 매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의 등장은 정치행위자와 유권자 간의 접촉을 직접적인 접촉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언론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바람직한 선거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언론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냉소주의, 무관심을 조장하여 민주주의 퇴행(backsliding)을 초래할 수도 있다(권혁남 2006). 이에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언론의 선거보도를 평가하는 것은 단지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사회와 학계의 선거보도 감시 또는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선거 시기 언론보도 감시 또는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는 주로 기자협회, 노조, 언론현업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거보도 감시와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개별적 또는 연구 집단별로 선거보도 감시와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 발제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한국에서 있었던 최근 3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의 선거보도 감시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치뤄진 제20대 대통령선거보도 모니터링을 종합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해 향후 바람직한 모니터링 혁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선거보도 모니터링

일반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용어는 행정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행정학사전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정책평가에서 프로그램이 처음의 설계대로 운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당초 대상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되는가를 평가하는 형성적 평가의 한 기법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상적인 영역에도 모니터링이 확대되어 의정 모니터링, 제품 모니터링, 품질 모니터링과 같이 사용되면서 당초의 목적에 따라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환류(feedback)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된다.

대선보도 모니터링 역사는 1980년대 언론시민운동의 발전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시민운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가장 핵심적인 법제도 개선 운동을 기반으로 미디어교육운동, 대안미디어운동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후 1990년대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감시운동이 본격화되는데, 언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감시운동의 시작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의 행정감시운동, 의정감시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비슷한 시기 언론시민운동계에서도 이른바 저질프로그램 감시 및 고발, 편파 왜곡보도 비판, 소

수자 권익 보호, 언론사의 경영 및 편집 감시운동이 시작되었다. 그중에서 대통령 선거보도 감시운동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최영목 2011, 460).

그러나 사실 1992년 선거보도 감시운동의 시작을 확정하기는 부족한 감이 있다. 이미 1987년 대선에 서부터 선거보도 감시와 관련된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1992년이 시작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990년대 본격적인 언론사 노동조합 출범과 시민운동이 결합해 시작된 감시운동은 19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직화되었다. 특히 1992년은 선거보도 감시운동의 획을 그을 정도로 언론사 노조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감시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첫째, 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언론 모니터 및 감시운동이 활발해졌다. 이어 1992년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선거보도 감시활동을 공식화하였다. 이는 언론사 노조와 언론시민운동단체가 연대하여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보도를 감시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선거보도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사회 내에서 공정선거와 관련된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경실련>과 <YMCA>를 주축으로 많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최영목 2011, 458).

이후 선거를 전후하여 언론사 노조와 기자협회, 언론시민단체의 선거보도 감시 또는 모니터링이 정례화 되었다. 첫째, 1992년 대통령선거 이후 총선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전국선거 그리고 중요한 보궐선거에서 선거보도 모니터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한국 정치에서 선거보도 모니터링이 선거마다 일상화 되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감시대상도 확대되어 1990년대 후반에는 지역언론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 신문, 지역민방 그리고 최근에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포털,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으로 감시영역이 넓어졌다.

이러듯 언론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선과 총선, 전국 동시지방선거보도 모니터를 기반으로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 이벤트를 보도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선거보도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는 기존 언론보도 행태의 비판점에 주목한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인 선거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은 주로 편향적 보도, 부정적 캠페인 중심의 보도, 경마식 보도,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 잘못된 인용 보도, 비과학적인 보도, 지역감정 자극, 미진한 주요 이슈 보도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안차수 2006; 이관열 1992; 노동렬 2012, 158-159).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권혁남(2006)은 언론의 선거보도 문제점을 10가지로 정리했다.

<표 1> 한국 언론의 선거보도 문제점 10가지

	문제점	내용
1	선거과열 조장	- 후보간 대결 양상을 심화하는 경향 - 예비후보, 0룡, 잠룡 등 사전선거 분위기 조성
2	가십과 스케치 기사의 강조	- 재담, 비방, 말장난, 패션 등의 피상적 선거보도 중심
3	전략적 대결 보도	- 3자대결, 4자대결 등 대결 구도 - 게임이나 전쟁 용어 사용
4	편파보도	- 특정 이념과 여야지지 성향에 따른 편향적 보도

5	경마식 보도	- 경마식 저널리즘 보도 중심
6	이슈 보도에 인색	- 정책 비교, 검증,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언급 부족
7	정당 수뇌부 중심의 선거보도	- 정당 지도자 중심의 선거보도
8	부정주의 보도	- 선거 무관심, 흑색선전, 불법 부정선거 등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냉소주의와 혐오감 조장
9	지역감정 조장	- 지역감정의 조장이나 부추김 - 선거를 지역 간 대립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사
10	선거 여론조사의 부정확성	- 판세분석과 경마식 저널리즘의 활용 - 선거결과 예측에만 치중하고 정책선거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함

* 출처 : 권혁남(2006, 390-398)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한편 선거보도에서 시민적인 관점의 부재를 지적한 연구도 흥미롭다. 이런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첫째, 엘리트 의제가 주로 보도된다는 지적, 둘째, 시민 유권자가 중요시하는 내용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다는 시민 저널리즘적인 지적이 있다. 김정기(2004)는 선거보도와 관련한 내용분석을 통해 시민 저널리즘(civic journalism)이 상업화로 치달은 언론시장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시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의제를 보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맥래드 등(McLeod, Kosicki, & McLeod 2008)이 강조한 바와 같이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같이 시민의제 중심의 바텀 업(bottom up) 선거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민주화 이행 이후 선거보도와 감시, 모니터링이 확대되면서 언론사 노조, 언론시민단체, 학계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거보도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은 부족하다. 여기에 ICT 발전에 따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등장, 포털, 유튜브 등으로 선거보도가 확장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레거시미디어 중심 모니터링도 보다 확장되었고, 그 내용 역시 광범위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발전한 선거보도에 비해 체계성이나 평가의 틀, 미래지향적인 개선점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Ⅲ. 대선보도 모니터링 평가

1. 2012년 제18대 대선보도 모니터링

2012년 제18대 대선 선거보도 평가는 과거 모니터링 보고서와 다르게 <2012 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총평가보고서>가 남아 있다. 과거에도 대선보도 모니터 개별 보고서와 중간 및 종합 토론회 평가 자료는 남아 있지만, 종합보고서 또는 백서 형태로 제작되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제18대 대선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 대선에서는 개별 모니터 보고서와 성명서 등이 언론단체, 노조, 네트워크 형태의 공동 모니터링단이 발표했지만, 종합보고서로 남아 있는 것은 제18대 대선이 유일하다.¹⁾

1) 개요

제18대 대선 모니터는 민언련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민언련은 ‘2012 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이하 민언련 모니터단)을 구성해 2012년 10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 등 5개 일간지와 KBS·MBC·SBS 등 방송 3사의 선거보도를 모니터했다. 그 과정에서 신문 모니터 보고서 28건, 방송모니터 보고서 24건, 논평 6건 등 총 58건의 대선보도 모니터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활용하여 11월 29일, 2012 대선보도 중간평가토론회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한 언론, 이대론 안 된다”를 열어 모니터 결과 드러난 선거보도의 문제점들을 고발하고 최종 활동결과를 <2012 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총평가보고서>로 발표하여 제18대 대선보도 감시활동을 종합하였다.

2) 주요 내용 평가

제18대 대선보도 모니터링의 메인 주제는 “선거운동원으로 된 언론, 역대 최악의 선거보도로 기록”이었다. 방송과 신문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 방송은 방송 3사(KBS, MBC, SBS) 메인 뉴스를 중심으로 2012년 10월 29일~12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제18대 대선 방송 모니터링 요약

구분	주제	세부 내용
양적 분석	대선관련 보도 빈도 분석	- 기술적인 통계량
	보도 주제별 보도량 비교	- 주제별 보도 비교
	선거보도 후반배치 사례	- 메인뉴스 제외 사례
보도 내용별 분석	야권단일화, 단일화 회동부터 안 사퇴까지...방송3사 “갈등”	- 야권단일화 협상 과정...경쟁·게임 프레임 남발 속 의미 축소 - 새누리 ‘단일화 야합’ 비방...방송3사, 연일 비중 있게 실어 - 단일화 ‘효과 없다’?...방송3사, 안 사퇴 후 의미축소 나서
	최다보도 ‘후보행보’...분량 화면 구성 내용까지 편파 일색	새누리 방송3사 공개압박 ‘신 보도지침’ 논란
	정치공방 보도...네거티브 중계 주도한 방송3사	- 국정원 직원개입, SNS 불법선거운동...여야 공방처리 - 멈추지 않는 NLL 북풍몰이...방송3사 검증없이 의혹 증폭 - 새누리 반대로 무산된 투표시간 연장...방송3사 침묵 - 야권 깎아내리기...확대재생산에 적극 나선 MBC
	후보자 검증 외면...‘의혹제기 중계’ 올인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2년 이후 대선보도 모니터를 진행해 온 민언련을 비롯한 언론사 노조,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과거 자료를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보도 실종...MBC, 빈도 내 용왜곡 심각	- MBC, 정책의제 왜곡 사례 - 언론정책 무관심 넘어 스스로 재갈 문 방송3사
시사 토론 프로그램 분석	시사프로그램, 지난 대선의 29.8% 수준으로 떨어져	
	선관위 법정토론회, 형식 굴레 못 벗어나	

다음으로 신문은 2012년 10월 29일~12월 20일 기간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5개 일간 종합지 신문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역시 중요한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제18대 대선 신문 모니터링 요약

구분	주제	세부 내용
보도 내용별 분석	이중 잣대	- <조선><동아> “야권 단일화 = 유권자 권리 침해, 보수 단일화 = 유권자 선택권 보장”? - 조중동, ‘막말’에 대한 이중 잣대
	은폐·침묵	- 조중동,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는 누락 - 참정권 보장 차원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는 못 본 척
	의제 왜곡 및 호도	- ‘경제민주화’가 서민경제를 악화시킨다? - 박근혜의 경제민주화가 ‘재벌 규제 대책’이 강하다?
	분열조장	- ‘익명 취재원’ 등장시켜 문-안 분열 조장한 조중동 - “안철수는 문재인을 도울 생각이 없다” 거리 벌리기 나선 조중동
	물타기	
	지역주의 조장	
	‘네거티브’를 ‘검증’으로, ‘검증’을 ‘네거티브’로...	- ‘거짓말’로 드러난 정문헌 의원의 ‘비밀·단독 회담, 북측 녹취록’ 띄우기 - 선관위에 고발된 ‘새누리당 불법 선거 운동’, 조중동은 ‘사실 검증’ 포기 -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조중동, “민주통합당의 네거티브”로 몰아
	색깔론·북풍몰이	- ‘NLL 포기발언’ 논란 잦아들자 과거 정부가 ‘류경호텔에 투자하려고 했다’? - 대선 후보를 정할 때는 “북한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사람”을?
	공약불이행 종용	

이상을 바탕으로 2012 대선보도 민연련 모니터단은 이종 잣대, 은폐·침묵, 의제 왜곡 및 호도, 분열 조장, 몰타기, 지역주의 조장, 네거티브 띄우기, 검증포기, 색깔론·북풍몰이, 공약 불이행 중용 등을 사안마다 최악의 보도를 낸 방송과 신문사 기사를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방송은 11건, 신문은 10건이 최악의 보도로 선정되었다(조선일보 5건, 중앙일보 1건, 동아일보 4건).

2. 2017년 제19대 대선보도 모니터링

제19대 대선보도는 2017년 3월 '2017 대선미디어감시연대'를 발족하면서 시작됐다. 제19대 대선보도 모니터링부터 민연련 홈페이지에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어 DB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전환이었다. 덕분에 후속 대선보도 모니터링 등 관련 자료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2016년부터 이어진 촛불집회와 탄핵으로 매우 급히 선거일정이 확정되었지만, 투쟁역량이 집결되면서 단기간에 조직적인 대선보도 모니터링을 위한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통신사와 네이버, 다음 포털, SNS(페이스북)까지 감시를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 일간지 6개와 경제지, 지상파 방송 3개, 종합편성채널 4개, 보도전문채널 2개와 이들 언론사의 SNS, 연합뉴스 및 뉴시스 등 통신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까지 모두 모니터링 하였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종편 4개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에서 방송하는 33여 개의 시사토크쇼까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지역언론사까지 망라하여 광범위한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

모니터링 결과는 긴급 논평, 일일 브리핑, 주간 보고서, 주요 공약정책 보도 보고서 등 이슈별·기간별 콘텐츠로 제작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공개하였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대선보도와 관련해, “선거보도 감시준칙”을 제시하여 언론인들에게 사전 환기를 하는 등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시도했다.²⁾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 50일 전인 3월 20일 '2017 대선미디어감시연대' 발족을 시작으로 4월 18일 중간평가, 5월 25일 총평가 토론회 등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모니터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3〉 발족선언문 상의 모니터링 대상 주요 신문, 방송, 통신사, 포털

구분	모니터 대상 매체
신문보도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등)
방송보도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저녁종합뉴스

2) 감시준칙은 주요 내용은 8가지 분야로 구성하여 하위 원칙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1. 유권자의 정치적 냉소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선거보도를 감시한다.
2. 후보의 자질과 공약에 대한 평가와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보도를 지향하는지 감시한다.
3.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지역주의·소지역주의 선거보도를 감시한다.
4. 선정적인 경마식 보도를 감시한다.
5. 양시양비론과 기계적 균형을 넘어서는 선거보도를 지향하는지 감시한다.
6.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유권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지 감시한다.
7.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진, 소수, 진보 후보를 충분히 보도하는지 감시한다.
8. 근거 없는 음모론과 흑색선전, 의혹 폭로 등 부정적 선거보도를 감시한다.

신문방송사 페이스북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의 페이스북 선거관련 게시물
종합, 보도전문채널 시사토크쇼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시사토크쇼(33개 가량)
방송 토론, 시사프로그램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대선후보 토론프로그램과 시사프로그램
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 대선 관련 보도
포털	네이버, 다음 대선 특별페이지

〈표4〉 발족선언문 상의 모니터링 대상 지역언론

	신문	방송
경기지역	경기일보, 경인일보	없음
경남지역	논의 중	논의 중
광주전남지역	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광주매일	논의 중
대전충남지역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금강일보	KBS대전총국, 대전MBC, TJB대전방송
부산지역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전북지역	전북일보, 새전북신문,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 전주CBS
충북지역	충부매일, 충청타임즈, 충북일보	KBS청주, MBC충북, CJB

모니터 기간 발표된 보고서는 184건이었다. 모니터링 대상 언론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모니터링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모니터링 보고서 중 의미 있는 보고서와 기존과 다른 특징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9대 대선보도 모니터링에서는 신문, 방송, 종합, 통신사, 포털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어 광범위한 언론사의 모니터링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이었다. 특히 경제지 모니터링이 시작되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경제지의 대선보도 모니터링을 본격 가동하였다.

둘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포털 대선특집페이지, 언론사 소셜미디어 등도 모니터 대상에 포함되었다. 역시 레거시미디어와 함께 뉴미디어 영역에서 대선보도 모니터링이 시작되었다. 물론 포털의 경우 과거에도 개별적인 모니터링이 있었지만 제19대 대선부터 본격적인 감시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2017 대선, 포털 모바일 뉴스 모니터의 시작과 그 의미(4월 19일)”, “포털 모바일 뉴스편집, 정책보다 갈등·대결 뉴스 우선하나?(4월 27일)”, “페이스북 저널리즘의 문제 정립 필요(5월 21일)” 등 많은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특히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양한 시민의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검증 모니

터링까지 진행되었다.

셋째, 가짜뉴스, 팩트체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당시 시대적으로 가짜뉴스의 경각심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차원의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모니터링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가짜뉴스, 소개하는 척 유포하는 조선(3월 21일)”, “팩트를 의혹으로 바꿔버린 TV조선의 ‘팩트체크’(4월 17일)”, “후보자 정책·논란·의혹 ‘팩트체크’ 늘었다(4월 18일)”, “‘팩트’ 없는 ‘팩트체크’, TV조선의 ‘팩트체크’ 왜곡(4월 27일)” 등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보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넷째, 시사토론회와 통신사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과거와 다른 분석을 시도하였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토론 패널 출연을 고발하거나, 토론 패널의 부도덕한 발언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제화 시키는데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진보 31명 vs 보수 151명, 종편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4월 11일), “‘文 유세차사고’ 근거도 없는 의혹 주장한 MBN 이승훈 변호사”(4월 24일)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림 1〉 모니터링 보고서 리스트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344	선거보도 4건 중 1건은 문제 보도, 정당·후보기간 감정 다름 소개 빈번	314	2017-03-27
343	선거보도 인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부정 묘사'도 영달아 '최고'	449	2017-03-27
342	선거보도 홍준표 '선거용 막말'에 맞장구치는 동아·중앙	308	2017-03-27
341	선거보도 대선 맞이한 경제지를 일제히 '정치 혐오', 그 특격은 '대기업 지키기'	421	2017-03-27
340	선거보도 MBC 비판하면 파견주의? 고배 올린 MBC	1060	2017-03-27
339	선거보도 세월호, 대선에 '명함' 끼칠까 전전긍긍하는 조중동	669	2017-03-24
338	선거보도 무단 유출된 경선 결과, 보도로 유포한 TV조선	684	2017-03-24
337	선거보도 문재인 비판에 '보보보'...계 발 처리는 MBC	547	2017-03-23
336	선거보도 '가짜뉴스' 비판하며 '문재인 가짜뉴스' 유포하는 TV조선	824	2017-03-23
335	선거보도 세월호 인양 당일, 최안행 사건이 더 슬픈 일 아니냐는 조선	458	2017-03-23
334	선거보도 아담엔 '네거티브' 여당은 우호적으로...방송사들의 '편애'	431	2017-03-22
333	선거보도 '박근혜 문재인 역기'에 사활 건 동아·조선	252	2017-03-22
332	선거보도 저유한국당 입안 쳐다보는 TV조선, '문재인 때리기' 위한 공수?	887	2017-03-21
331	선거보도 문재인 가짜뉴스, 소개하는 척 유포하는 조선	828	2017-03-2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364	선거보도 문재인 경선 승리...MBC "아들 특혜"	1196	2017-04-04
363	선거보도 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에만 불리한 보도 많아	553	2017-04-04
362	선거보도 국민의당 배론경당 밀어주는 '편파유리' 늘었다	520	2017-04-04
361	선거보도 '안보불안' 부추기고 '속석선전 해라' 조선의 '선거 탕'	332	2017-04-04
360	선거보도 경채 경쟁 막는 경제지의 '포퓰리즘 망령'	299	2017-04-04
359	선거보도 안철수의 끝내임은 '행수적 안철수?'	457	2017-04-04
358	선거보도 3일간 8건...TV조선 '안철수 띄우기' 올인?	570	2017-04-03
357	선거보도 '안철수 띄우기'에 전념한 조중동, 노골성에서는 동아가 앞장	580	2017-04-03
356	선거보도 아랍의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가 '위선과 용수를 파는' 것이라는 조선	338	2017-03-31
355	선거보도 '안철수, 루이 앙스트롬 같다'...채널A의 '안철수 띄우기'	672	2017-03-31
354	선거보도 기권표를 무효표로 보도한 채널A, 의도는?	614	2017-03-30
353	선거보도 홍준표 막달은 우호하고 이재명 추시투자는 모순이라고 지적	616	2017-03-30
352	선거보도 '문재인만 이기자!' 반문연대 아랍 특려 나선 조선	547	2017-03-30
351	선거보도 조선일보 1면, '박근혜' 대신 '고영태'	309	2017-03-29

* 출처 : 민언련 홈페이지

(<http://www.ccdm.or.kr/xe/index.php?mid=watch&category=6295&page=24> 등)

3. 2022년 제20대 대선보도 모니터링

한편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선거보도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종합하여 미디어감시연대 보도백서로 출간되어 자체적으로 DB화가 되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보도 모니터링에서는 정책, 인물, 여론조사, 팩트체크, 포털 등 영역별로 집필하여 선거보도 모니터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①2021 재보궐선거 미디어감시연대의 출범과 모니터링 개요, ②2021 재보궐선거 이슈 특성과 선거과정 분석, ③선거보도와 검증보도, ④부동산 정책 이슈, ⑤여성 정책 이슈, ⑥인물 검증 이슈, ⑦선거보도와 여론조사, ⑧선거보도와 팩트체크, ⑨

선거보도와 포털, ⑩좋은 선거보도의 기준과 요소, ⑪시민이 본 선거보도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백서 형태로 출간되었다.

제20대 대선보도 모니터링은 언론·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연대조직을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2022년 1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24곳은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나섰다.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기존 신문과 방송, 종편, 지역언론사와 함께 급격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포털, 유튜브, SNS 등 신유형 뉴스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정보·뉴스 유통의 변화가 선거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모니터링 하였다.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의 대선보도 모니터 보고서는 제19대에 비해 횟수는 줄었지만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모니터가 진행되었다. 제19대 대선보도 모니터링 보고서가 주로 현안 이슈 중심의 속보성 모니터링 보고서가 주류였다면, 제20대 보고서 65편은 심층성을 추가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확인된다. 기존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영역인 유튜브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모니터링 방법론이 시도되었다.

〈표5〉 제20대(2022년) 대선보도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

No	분류	제목	발표
1	신문/방송 여론조사	여론조사 보도① 오차범위 무시, 서열화 표현, 결과 왜곡 '원칙 무시'	1/25
2	신문/방송 여론조사	여론조사 보도② '2030-젠더' 여론조사도 입맛대로 끼워 맞추나	1/25
3	신문/방송 여론조사	여론조사 보도③ 지지율·호감도 편중 심각, 중앙일보·채널A 압도적	1/25
4	지역	[부산] 질문하는 언론은 어디에? 후보 행보·발표 공약 받아쓰기 보도에 그쳐	1/28
5	신문/방송 여론조사	D-30 '무의미한' 오차범위 여론조사, 신뢰할 수 있을까	2/7
6	신문/방송	언론이 외면하는 고용·노동 정책, 일자리 정책 혼란만 초래	2/8
7	신문/방송	'RE100·택소노미' 회화화한 언론, 2차 토론 무산 책임 왜 안 묻나	2/9
8	신문	"안하면 배신, 놓치면 한" 단일화 목매는 언론	2/9
9	지역	[부산] '개발 공약'만 부각한 지역언론 소수정당 홀대가 '사회적 약자 공약' 홀대로 이어져	2/9
10	지역	[광주·전남] TV토론 건너뛰고...아젠다 발굴 없는 지역 대선보도	2/10
11	포털	[포털뉴스 모니터] 좋은 정책 기사, 포털에서는 안 보인다	2/11
12	종편	종편 시사대담 출연자 보수·남성·언론인 편중 심각	2/14
13	종편	정책검증 실종 속 지상파 선거보도 종편 '반토막'	2/14
14	신문/방송	정책보도 10건 중 검증 1건, '공수표' 못 거른다	2/15
15	지역	[경남] 유권자 중심 보도에서 지역주의 조장 보도까지	2/15
16	지역	[경기] 정책보도는 받아쓰기 치중, 갈등·논란 보도 비중 높아	2/15
17	신문/방송	청년세대 '좋은 일자리' 최대 관심, 고용·노동정책 검증보도는 단 3건	2/16
18	지역	[부산] 지역언론 균형발전·지역소멸 해법에 주목. 후보별 언론정책 평가는 외면	2/16
19	지역	[충북] 기자 취재 대신하는 '여론조사'와 특별취재 없는 '특별취재팀'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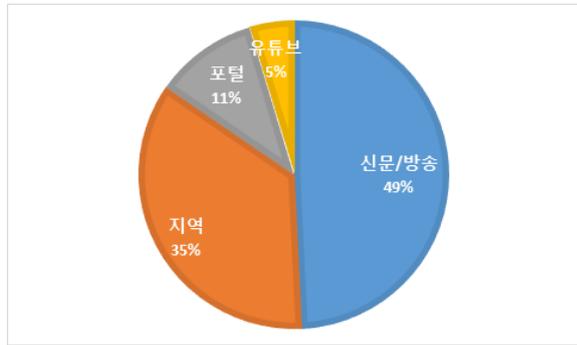
20	포털	[포털뉴스 모니터] 여론조사 악용 함량 미달 기사 범람 정책·후보 검증 홀 대한 채 '단독' 남발해 클릭 장사	2/17
21	지역	[광주·전남] 기획보도 없는 지역언론...지역갈등 조장도 여전	2/17
22	방송	김혜경 의혹 172분 VS 김건희 의혹 17분, 종편 '10배 차이'	2/18
23	유튜브	[유튜브 모니터] "유튜브, 2022 대선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모니터링 1차 보고서를 중심으로	2/22
24	방송	방송뉴스 유세 맞춘 지역공약 최다, 정책검증은 3% 미만	2/22
25	신문	신문보도 정책검증 10%대 제자리, 조선일보 가장 소홀	2/23
26	지역	[경남] 정책 보도, 검증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2/23
27	포털	[포털모니터보고서 특별기고] 사라진 대선뉴스 특집, 사라진 포털 공론장	2/23
28	지역	[경기]선거보도 기사양은 전반적으로 증가, 정책은 검증보다는 내용중심의 받아쓰기 많아	2/23
29	신문/방송	불평등 해결 위한 담론 형성 가로막는 왜곡 보도, 특정 후보 편들기가 목적인가	2/23
30	포털	[포털뉴스 모니터] 흡연과 구뎃발에 밀린 정책 뉴스	2/23
31	지역	[충북]네거티브 확산기 등 습관 버리지 못했지만, 불만한 정책 보도도 다수	2/23
32	지역	[부산]공식선거운동 시작되자 선거보도량 늘고 정책보도 줄었다	2/24
33	지역	[광주·전남] 군소정당·시민사회 외면하는 지역언론	2/24
34	신문/방송	종편 시사대담, 김혜경 '의혹' VS 김건희 '행보' 치중	2/25
35	방송	'윤석열로 단일화' 대담 '안철수로 단일화'보다 7배 많았다	2/25
36	신문	'정책검증' 한겨레 24건 VS 조선일보 7건	3/1
37	방송	지상파 선거보도량 여전히 종편 반토막, TV조선·채널A 최다	3/1
38	방송	이재명 '기축통화국' 발언 팩트체크 방송사별 온도차	3/1
39	방송	채널A '단일화' 16건 압도적, TV조선 "마음 멀어진 건 아니다"	3/1
40	지역	[경남] 투표일 다가와도 보도량 제자리, 정책보도량 편차 큰 지역신문	3/2
41	지역	[경기] 대선 후보 공보물 광고 이후 홍보성 기사 보도	3/2
42	신문/방송	노동없는 대선, 노동공약 없고 발언하지 않는 후보에게 책임 물어야	3/2
43	지역	[부산] 후보 간 공방·행보 받아쓰기 보도로 유권자 정치피로감에 지역언론도 한 몫	3/2
44	유튜브	[유튜브 모니터] 유튜브 채널의 언론보도와 여론조사 인용, 가이드라인이 없다	3/2
45	포털	[포털뉴스 모니터] 안타급 기사는 나온다, 관심이 없을 뿐	3/2
46	지역	[충북] 구태의연한 "충청의 사위" 여전, 검증 없이 전달만 하는 언론	3/2
47	포털	[포털모니터보고서 특별기고] 네이버 제20대 대선 특집페이지, 제19대와 비교하니...줄어든 뉴스 콘텐츠와 기획, 그래픽 뉴스의 부재	3/3
48	지역	[광주·전남] 지역신문협의체, 균형발전 비전을 묻다	3/3
49	방송	'김혜경 의혹' 채널A 90분-TV조선 86분, 김건희 '반려견 산책'도 행보?	3/4
50	종편	종편 대담, 단일화 '철화결렬' 후 더 늘었다	3/4
51	신문	조선일보 "윤 결단과 안 용단" 나홀로 찬사, 언론인가 캠프인가	3/4
52	방송	2월 방송뉴스 정책검증 1248건 중 51건, '부끄러운' 4%	3/7
53	신문	조선일보 100건 중 정책검증 '4건', 이재명 후보만 비판했다	3/7

54	종편	채널A-TV조선 '윤석열 봐주기 수사' 음성파일 모른 체?	3/7
55	신문/방송	투표 전 필독, 유익한 선거보도 추천합니다	3/8
56	신문	'노동없는 대선', 검증 보도 한계 보여준 한국일보 '솔루션'	3/8
57	종편	채널A, 다른 여론조사 놓고 '단일화 후 윤석열 결집' 해석	3/9
58	종편	종편은 왜 '빨간 넥타이' '빨간 스카프' '빨간 양말' 부각했을까	3/8
59	지역	[경남] 대선후보 정책보도 '수박겉핥기', 기획 없는 경남일보, 경남매일	3/8
60	포털	[포털뉴스 모니터] 대선 막판에도 가벼운 뉴스로 들끓은 포털	3/8
61	지역	[부산]대선 마지막 주, 유권자 위한 보도 적고 후보 유불리 따지는 판세보도 늘어나	3/10
62	지역	[경기]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 외면, 다른 프레임으로	3/10
63	지역	[충북]대부분 '말잔치' 중계했지만, 약자 참정권 보장 문제 조명하기도	3/10
64	지역	[광주-전남] 끝까지 무기력한 지역언론...지방선거땐 달라져야	3/15
65	유튜브	[유튜브 모니터] 2022 대선에서 유튜브가 보여준 가능성과 한계	4/1

< 표 6 > 모니터링 보고서 구분

구분	건수	비고
신문/방송	32건	- 신문만 분석 6건 - 방송만 분석 8건 - 종편만 분석 6건
지역	23건	
포털	7건	
유튜브	3건	
총계	65건	

< 그림 2 > 모니터링 보고서 구분



개별 내용을 발제문에서 모두 요약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제20대(2022년) 대선보도 모니터링 보고서를 몇 가지 유형화해 살펴보면, 신문과 방송 보고서가 32건으로 전체 보고서 중에서 49%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지역으로 구분했지만 지역보고서 역시 지역신문과 방송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중도 32%에 달한다. 그리고 이번 대선보도 모니터링에서 관심을 가졌던 포털과 유튜브 역시 10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어 대선보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고 있다. 특히 포털과 유튜브 모니터링 보고서의 경우 직접적인 내용 분석 보다는 포털 대선특집페이지의 축소, 알고리즘 기사배열의 문제점 지적, 유튜브 채널별 편중성과 제도화 미비 등 다각적인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IV. 선거보도 모니터링 혁신을 위한 7가지 제안

제20대 대선은 알려져 있다시피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정책과 미래 비전은 사라지고 의혹과 흑색선전, 세대별·젠더 갈라치기 등 분열적 선거 캠페인으로 일관된 선거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이번 대통령선거 캠프의 전략은 앞으로 한국 정치사에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과거 1990년대의 지역과 이념을 둘러싼 네거티브 선거전 이래 가장 안 좋은 선

거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 점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의 책임을 모두 선거캠프의 전략 문제로 덮을 수는 없다. 분명히 일부 언론사의 대선보도는 분열적 선거 운동에 동조하거나 오히려 한술 더 뜨는 치졸한 선거보도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최근 20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정치언론'의 부정적인 문제점이 또다시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의 65편의 보고서는 이런 '정치언론'의 민낯을 정확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자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이래 대선과 총선 등 전국선거에서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의 선거보도 모니터링은 점차 발전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선거보도가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일부 '정치언론'이 스스로 플레이어(player)가 되어 선거 캠페인에 등장했다. 그렇다고 그동안의 모니터링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보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선택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모니터링을 통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언론사 내외부는 당연하고 객관적인 시민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서 태동한 시민단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시민사회는 국가 또는 시장과는 별개로 제3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언론의 문제점을 견인하고, 감시를 강화해 시대정신이 살아있는 그리고 공정한 선거보도가 진행될 수 있는 감시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복잡한 전선으로 전개되는 대선에서 중심을 잡고 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은 결국 언론의 몫이고 그것을 때로는 함께, 또 때로는 비판자로서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사회의 모니터링의 중요한 맥락도 여기에 있다(송경재 2007).

이번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 모니터링 보고서는 성과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니터를 통해서 얻은 성과와 한계를 잘 검토하여,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 모니터링에서는 이번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혁신적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위한 7가지 방안을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과학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기법의 고도화

1992년부터 누적된 질적·양적 분석에 기초한 다양한 모니터링 기법은 중요하다. 따라서 현 단계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에서 진행한 모니터링 기법의 체계화·과학화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 모니터링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은 인력 재배치, 구성원의 변화, 주체의 부재 등으로 아직은 불완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1992년 이후 흩어진 모니터링 방법론의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를 매뉴얼화 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모니터링에 참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지 선거 국면에서 만의 모니터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후술하겠지만 유튜브, 소셜미디어, 포털뉴스, 커뮤니티 등의 발전으로 기존 모니터링 방법론의 체계화와 함께 새로운 방법론 모색도 필요하다.

대선보도 모니터링 기록의 축적 : (가칭)〈선거보도 디지털 아카이브〉

다음으로 혁신방안은 아니지만, 그동안 간과했던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과거 선거 보도 관련 모니터의 성과가 계승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과거 기록의 유실에 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현재 최근 대선과 총선 등을 제외하고 과거 모니터링 기록이 보관되지 못하고 있다. 각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유관단체에는 보관되어 있을 것이지만 이를 종합화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기록의 중요성은 학자들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과거 선거보도 모니터링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 기초자료들이 유실되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미래지향적인 (가칭)〈선거보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가칭)〈선거보도 디지털 아카이브〉는 단순히 과거 자료를 모으자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언론 운동의 역사를 체계화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단순히 시민단체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 언론사 연구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대선, 총선, 동시지방선거 등 전국선거 모니터링이나 선거보도 감시 기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중요 선거마다 백서 등의 제작 의무화 및 시민공개로 언제든지 포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단체와 현업단체의 자료 발굴과 언론진흥재단의 자료 및 물적 지원도 필요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빅데이터, 검색 등) 지원 방법에 대한 고민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단체나 집단은 한정적이다. 일단 기술개발의 비용이 많이 들고, 무엇을 디지털화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셜미디어, 동영상 뉴스의 증가 등 복잡해져 가는 언론환경을 고려한다면 선거보도 모니터링 역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모니터링을 여전히 수기로 작성하고, 시청하면서 많은 뉴스와 보도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기사검색과 모니터링 대상 단어 도출, 동영상 감시를 위한 디지털 기술적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언론시민운동의 과학화 전망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기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역언론 모니터 역량 강화

1991년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있다. 과정에서 지역의 중요성은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영역에서도 이제 지역민들에게도 지역 이슈가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선거 국면에서 모니터링 양도 증가하고 있고 지역언론시민운동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아울러 최근 10년 동안 선거보도 관련 모니터링 역량도 축적되고 있어 지역언론의 모니터 발전에 거는 기대도 크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비해 언론사 노조, 언론시민운동 단체의 양적인 활동도 적고 물질적 지원도 적은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선거보도 모니터링에서도 체계적이고 세밀한 감시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술적·방법론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실제 일부 지역언론의 편파보도와 특정 정당 지원은 불법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광역단위 모니터링 지원방안과 문

제가 많은 지역신문 또는 지역민영방송만 타게팅 하는 등 한 역량에 맞는 모니터링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포털과 유튜브 등의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

언론의 다양화는 이미 1990년대 후반에 예측되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언론의 변화는 과거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로봇(인공지능) 저널리즘’이란 용어가 나올 정도로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뉴스 유통방식도 과거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구조 역시 텍스트와 이미지에서 동영상으로 재편되고 있다. 기존 언론사의 뉴스만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정치콘텐츠는 감시받지 않은 채 편파적인 정보를 양산하고 있다. 심지어는 불법허위정보인 가짜뉴스가 전파되어도 근원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거 신문, 방송, 종편 채널을 시청하고 모니터 하는 방법의 한계가 포털뉴스와 유튜브 모니터링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기존 방법론과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방법론의 정립이 요구된다. 포털뉴스나 유튜브는 주로 뉴스공급의 문제와 함께 유통 문제와 결합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신문과 방송 모니터와 달리 기준점을 철저히 이용자가 유튜브 채널과 포털뉴스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측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유튜브의 경우 최소한 10~20개 정도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유튜브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성과 선거법 규제 논의는 법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의 유튜브 선거 정보 유포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정보 확산과 유통이라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포털뉴스는 대선이나 총선 시기 체계화된 뉴스배열 이력 및 정보공개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포털뉴스는 현재도 이력을 공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초 단위로 뉴스가 변화하는 것을 모두 모니터링 하기는 불가능하다. 포털 운영사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시민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설계가 가능한데, 이를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사배열이나 뉴스 구독제 등을 시행하면서, 선거보도의 책임성을 줄이는 상황이다(송경재 2017). 포털 운영사는 과거 만들었던 “대선 특집페이지”를 아예 만들지도 않고, 실시간 뉴스제공 위주의 서비스로 개편하여 이게 과연 특집페이지인가 의문이 들 정도인 서비스 방식은 정말 개탄스럽다. 포털뉴스는 최근 2~3년 동안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뉴스 관련 데이터를 조사할 여지는 줄이고, 문제가 되는 서비스는 차단하고 있다. 한국의 포털뉴스는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는다고 뉴스서비스 방식을 줄이거나 없애는 유치한 발상은 그만두고 정당하게 언론으로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는 등 사회적 차원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포털뉴스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 필요

학계의 모니터링 방법과 관련된 논의도 활발해져야 한다. 선거보도 모니터링이 단순히 언론시민운동 차원에서 논의되고 학계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서 검증(Kovach & Rosenstiel 2001)과 사후 평가가 중요한데 학술적인 연계가 부족해진 것이다. 1987년 민주

화 이후 선거보도 모니터링과 감시운동이 활성화되자 학계의 연구도 활발했다(김정기 2004; 권혁남 2006). 하지만 최근 대선보도 모니터링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학계의 관심도가 멀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노력이 시들해진 것도 한 이유이다. 중요 선거보도 평가 토론회의 모니터링 보고서 활용이나 방법론의 개선 등에서 학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언론 내부의 노력 중요 : 자체 평가 정례화, 시청자·독자위원회 감시역할 강화

이번 네거티브 선거전이라는 비판은 일차적으로는 선거캠프를 운영한 정치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언론 역시 그 책임성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분명한 네거티브 선거전임에도 이를 악용하거나 오히려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의 선거보도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 스스로의 정화 노력은 이번에도 부족한 감이 있다. 당연히 언론사 내부에서는 노조, 기자협회 차원의 내부 사전·사후 검증이 필요한데, 이를 제도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내부에서 대선보도 관련 평가가 과연 있었는지 질문하고 싶다. 가능한 언론사 노조, 기자협회, 현업단체 중심으로 자사 선거보도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 토론회 진행해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청자 및 독자위원회’ 역시 선거보도 감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단지 일상적인 독자위원회가 아니라 선거 시기에는 시청자, 독자위원회 내부 전담위원회, 가능한 2~3일 단위 또는 온라인 상설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독자와 시청자가 스스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정기. 2004. “시민의제 위주의 하의상달식(bottom-up agenda setting) 선거보도 연구: 시민저널리즘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8권 1호. 174-216.
- 권혁남. 2006. “한국언론의 선거보도 특성.” 오택섭·권혁남·김성태 외. <현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서울: 나남출판.
- 노동렬. 2012. “신문의 선거보도행태와 사진이미지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8호. 158-166.
- 박주현. 2022. “미디어 선거보도의 잘못된 관행과 편파적 보도 원인.” 전북의 소리 2022년 1월 16일.
- 송경재. 2017. “포털 모바일뉴스, 객관적 중립성은 지켰으나 개선점도 많아: 대선 모니터평가와 제언.” <2017 대선 포털 모바일뉴스 모니터>
- 송경재. 2007. “위기의 인터넷 언론과 대선선거보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 언론 2007년 대선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신정현. 2005. <정치학>. 서울: 법문사.
- 안차수. 2006. “5.31 지방선거보도 현황과 문제점: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자료집, 51-74.
- 이관열. 1992. “14대 총선보도 검증: 방송.” <신문과 방송> 4월호.
- 조항제. 2011. “미디어, 권력, 민주주의.” 한국언론정보학회 역음.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서울: 한울아카데미.

- 최영목. 2011. “수용자로서 시민과 대안 미디어.” 한국언론정보학회 엮음.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서울: 한울아카데미.
- 헤이우드 앤드류(Heywood, A). 조현수 역. 2014. <정치학: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Kovach, Bill and Rosenstiel, Tom.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David Black Literary Agency.
- McLeod, Douglas, Kosicki, Gerald, & McLeod, Jack. 2008. “Resurveying the boundaries of political communication effects.” In Bryant, J. & Zillmann, D. *Media Effects*. Routledge.

시민의 선거보도감시 역사와 모니터 활동

김수정(중앙대 강사, 민연련 정책위원)

1. 들어가며

시민의 선거보도감시활동은 왜곡된 공론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직적이고 참여적인 정치운동 성격을 띠었고, 한국 언론의 민주화와 개혁을 위한 다양한 조직의 연대와 협업을 이끌었다. 선거보도감시의 핵심 운동 방식인 모니터 활동은 시청자이자 독자의 일상과 관련된 언론운동으로, 뉴스 소비와 이용자(수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김동원, 2016).

모니터 활동은 언론 민주화를 지향하는 수용자운동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수용자운동을 조직적, 상시적으로 전개하는 양상과 함께 시작됐다. 1984년 11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모니터회가 제1회 모니터 교육을 시작했고, 1985년 10월 YMCA가 제1회 TV모니터 강습회를 시작한 이후 모니터 활동은 언론운동단체의 주요 활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언론인운동에서 시민언론운동단체로 전환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학교를 열고 언론 모니터 강좌를 포함한 것도 중요한 계기였다. 1992년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는 기존의 수동적인 수용자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수용자로 전환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보다 조직적인 선거보도감시를 지속하게 한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시작된 언론 모니터 활동은 언론현상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여 실제 언론보도 내용이나 구조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는 선거보도감시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기능해왔다. 이는 선거와 같은 중대 사건에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고 가시적 결과물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혔고, 언론현업인들과 시민 양쪽에서 관심을 모았다. 다만 모니터 대상을 결정하는 데 뉴스 이용자가 실제 이용하는 뉴스의 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점, 분석 대상이 신문과 방송 위주의 전통 미디어 언론 뉴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분석 방법이 꾸준히 동원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선거보도 언론행태에 직접적인 변화를 추동할 만큼의 영향력이나 가시적 성과를 측정하는 등 충분한 평가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 글은 시민의 선거보도감시와 모니터 활동이 언론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언론은 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시론에 해당한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시민의 실천적 언론운동이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거보도감시의 역사와 모니터 활동의 전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며, 주요 활동 내용과 성과를 토대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언론개혁 과제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선거보도감시의 등장과 전개

선거보도감시의 등장 배경과 그 전개 및 효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시기별 선거의 특성과 언론 보도 추이, 모니터 보고서 내용과 언론 수용자의 반응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선거보도감시를 전개한 시기가 폭넓고, 모니터 활동과 이에 대한 언론과 수용자 반응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하고 분류할 수 없는 현실은 분석의 한계다.

우선 역사적 맥락, 즉 한국 언론의 권력과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 시기 언론의 권력화에 시민사회가 적극적 감시와 의견 개진으로 맞서면서 등장한 것이 선거보도감시활동이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정치적 변화 사이에 전개되는 역동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체계, 미디어체계가 작동하는 경험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항제(2003, 2017a, 2017b)는 한국 민주주의 30년 동안 언론이 과도하게 정치적 대표성과 영향력을 발휘해왔다는 언론의 권력화를 짚어냈고, 보수정당과 한국의 시장 지배적 보수언론이 병행연합해서 정치에 직접 개입해 진보정권과 대결했던 전쟁 국면을 설명해내며, 새로운 미디어의 부상과 레거시 미디어의 퇴조가 혼재된 미디어 생태계적 변화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잠재성을 갖추고 있다(송현주, 2021, 154-155쪽 요약).

조항제(2021)는 <한국의 민주주의 언론>에서 “한국 정치란 바로 미디어-정치이고, 정치행위를 한다는 것과 미디어 행위를 하는 것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며, 정치의 미디어화란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다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52쪽). 한국 사회가 민주화 이후 경험하는 언론과 정치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력, 그리고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염려는 ‘언론의 권력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한국 언론은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정부의 강압과 회유로 활동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됐다가 1987년 이후에야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정치개혁, 언론의 개방화·자유화 정책, 언론노조의 등장으로 미디어 구도에 획기적 변화가 이뤄졌다(윤영철, 1991). 1988년 국민주 모금으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1991년 SBS 민영방송이 등장했다. 여러 신문사의 증면 경쟁이 본격화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까지도 언론문제의 초점은 미디어에 의한 편향성 문제보다는 정권의 관여로 볼 만한 ‘관권’과 ‘금권’의 개입에 의한 편향성이 여전하게 중요한 관심사로 여겨졌다. 1992년 민주당이 낸 <제 14대 총선 부정선거의 실체>를 보면 △관권개입 △불법광고 및 홍보물 제작 배포 △향응제공·금품살포·선심관광 △선거선전물 훼손·폭력행위 등 선거운동 방해 등 사례가 적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해서 ‘부정선거’ 논란을 제기했던 것이 목격된다.

그러다 1990년대 중반부터 최장집(1994)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언론은 국가권력의 하급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시민사회의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서의 대기업과 사회최상층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막강한 힘과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었다(50쪽)”고 볼 만한 흐름이 나타난다. 정부는 더 이상 보도지침을 하달할 수도 언론통폐합도 명령할 수 없다. 언론 통제와 악명 높은 검열이 사라졌지만 그 틈새로 거대 기업화한 자본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가 서서히 강화되기 시작했다.

일례로, 한국언론연구원이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 제5회 전국기자 직업의식 조사(1997년)> 보고서에서 기자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을 보면 언론의 공정정보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언론인의 노력 또는 자질 부족(27.4%)’과 ‘언론사의 노력부족(26.2%)’ 등 기자 개인이나 소속사를 지적한 내적인 요인이 절반을 차지했다. 외적인 요인에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11.9%)’가 있었지만, ‘간부들의 간섭과 통제(17.4%)’, ‘광고주의 압력(14.2%)’보다도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공정정보의 저해 요인이라는 응답이 ‘광고주의 압력’이 저해 요인이라는 응답보다 축소되기 시작한 시기인 것이다.

언론인이 기사 선택과 기사 작성 방향을 결정하는 언론 자유도가 민주화 이후 크게 신장된 것도 큰 변화의 하나다. 1993년 응답자 88.5%가 기사 작성에 자유롭다고 응답했고, 1995년 78.5%로 떨어졌으나 1999년 90.7%로 높아졌다(한국언론연구원, 1993, 1995, 1999). 민주화 이후 국가 통제력이 줄었지만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생긴 일시적 공백에 언론 자본이 자기 권력화에 들어섰다는 ‘언론의 정치권력화’ 진단이 나온다.

최영재(2005)는 “한국 언론의 정파성은 민주화 이후 드러나기 시작한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균열 속에 언론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노골적으로 특정 정파의 편을 들어버리는 편가르기식 1차원적 당파화 과정 속에서 본격화됐다”면서 “한국 언론의 정파성은 그동안 정치권력과 유착공생했던 전력과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서 편향 보도로 특정 후보에 도박을 걸다 실패한 전력 등이 어우러져 한번 발을 디딘 정파성의 늪에서 쉽게 되돌아올 수 없는, 전근대적 타성 같은 것에서 비롯했다” 분석했다.

조항제(2017)도 비슷한 의견으로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세무조사 정국을 예로 들며 “시장 주류 신문이 그것도 가장 우위에 있는 세 개의 신문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더 많이 지지하는 다수당과 연합해 스스로가 권력임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인 의도성을 드러내면서 상대편을 공격했기 때문에 권력화되었다는 것”(14쪽)으로 진단하는 것에서 유사한 관점을 읽을 수 있다.

이준웅과 조항제, 송현주, 정준희(2011)가 ‘정치 병행성(political parallelism)’ 개념을 이용해 정치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한국적 특성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이행기에 언론 매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정당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다”고 보고, “특정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과 시장 지위가 강화될수록 공고화 단계에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이 제한된다”고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세은(2017)은 언론과 정치 간 인적 이동에 주목했는데, 폴리널리스트는 사회적 자본의 이동과 공유를 통해 언론과 특정 정당 간 유착관계가 형성됨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라고 언급했다. 언론인 출신 폴리널리스트가 한국에 유독 많은 이유는 “정치지상주의와 더불어 입신양명을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는 문화를 기저로, 정권의 필요에 의한 도구적 동원 및 정치 병행성이 강한 언론 시스템, 낮은 전문직화 수준, 언론환경의 변화로 인한 직업 안정성 감소 등 다양한 차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최장집(1994)의 논의를 다시 떠올려 본다면, 사회의 민주적 개혁은 언론의 개혁부터 출발해야 하며, 언론개혁은 언론 자체의 자정의식과 기능 회복, 그리고 국민과 시민단체의 외부로부터 감시와 감독을 통한 노력에 기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다음은 선거보도감시의 효과다. 선거 시기가 되면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다. 언론 역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거를 보도한다. 따라서 선거 기간 시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며 그의 공약은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한국 언론의 선거보도는 여러 고질적 문제점을 보여왔다.

승패와 선두다툼에 치중하는 경마중계식 보도, 거대양당 중심 보도, 정치적 공방이나 선거전략에 초점을 두는 선거전략 컨설팅 혹은 훈계 보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편드는 편파보도, 중요 의제는 외면하면서 사소한 이벤트나 에피소드를 부각하는 가십보도, 경쟁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부각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시민의 정치 효능감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냉소주의 보도, 전쟁용어를 남발하는 전장 보도,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를 강조한 보도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선거 뉴스가 신속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된다는 형식적 측면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심층적이다’, ‘정확하다’, ‘공정하다’와 같은 저널리즘 원칙과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선호·백영만·장경은, 2021, 16쪽 참조). 박재영, 안수찬, 박성호(2014)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다섯 차례 대선에 대한 신문보도를 분석한 결과 뉴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진단했는데, 다양한 관점에 기반한 심층적이고 균형적인 보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정파성을 지닌 보도가 증가했다고 보았다.

선거보도감시 활동은 문제 있는 보도 유형을 선별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 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로 좋은 선거보도가 무엇인지 구별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고

질적인 문제에 맞서왔다. 또한 선거 기간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선거보도 공정성 평가에서도 주요한 기준을 제시해왔다. 선거보도감시 활동은 언론이 제목의 서술 방식, 리드의 보도태도, 기사 유형과 주제 유형, 정보원의 등장 유형에 따라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유리하게 보도하는지, 반대로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도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언론의 공정하지 않은 보도태도를 드러내고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결정에 필수적인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난다는 본질적 문제를 마주하게 후보자의 공약 및 정책적 입장이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에도 유권자들은 실제 보도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하는 반면, 후보자의 과거 경력이나 선거 관련 유권자 반응, 후보자 발언 등은 지나치게 많이 보도되어 선거를 극한 경쟁 상황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다(김선호·백영민·장경은, 2021, 22쪽 참조).

선거보도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에 관한 입장 외에도 사회문화적 이슈와 관련해서도 특정 이념이나 입장을 강화, 재강화한다. 저널리즘의 역할은 공적인 사안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과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정치 전략적으로 특정 이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부추기거나 정치 냉소주의 효과를 낳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김춘식(2022)은 선거보도에서 단순 사실 위주로 전달하는 데 치중하는 언론 관행과 단일관점 보도, 인용부호를 활용한 의혹제기나 폭로를 중계하는데 머무는 관행적 보도가 언론의 민주주의 기능의 상실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중계보도와 갈등조장 보도는 윤성이(2015)가 지적하듯 이념의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획일화된 진보 보수의 틀에서 벗어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이익을 대표하는 구도가 더 다양하고 분산된 형태를 갖춰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정치 틀 속에서 인식하고 평가하고 다툼을 벌이는 이념 갈등이 실제 차이보다 증폭되기 쉬운 이유를 찾아보면 정치문화, 정치구조, 시민단체와 언론, 온라인 공간과 다차원적 문제가 있다(윤성이, 2015). 언론에게 요구되는 것은 갈등의 존재 자체를 부각하는 것보다 사회적 담론과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에 맞춰야 함에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관행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기자의 기본적 사명이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나올 리야 없겠지만 정권 시기에 따라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상대적인 경향을 보였다. 언론의 재정적 취약성, 지배구조와 행정규제를 통한 정부 영향력 확대, 정부의 적대적 언론정책, 예를 들면 검찰수사, 언론중재, 소송 같은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 권력감시 보도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 축으로 국정농단 폭로 보도 사례는 여론의 분노와 촛불시위로 나타난 성난 민심에 영향을 받은 언론사들이 권력감시 보도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한 계기라는 점을 확인시켰다(배정근, 2017). 인터넷과 모바일 기사 댓글을 통해 수용자의 반응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기자들로 하여금 수용자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수용자의 반응이 기사를 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보도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언론사 내부에서도 자사 보도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선거보도감시를 진행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저녁종합방송 <뉴스9>를 중심으로 신문방송학 석박사와 교수, 미디어 전문가 그룹을 두고 20대 대선 보도를 모니터하고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한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언론사 자체 모니터 혹은 내부 심의는 선거 시기 자사 보도가 타사에 비해 기획, 심층, 유용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강조하는 역할을 하며 자성과 쇄신의 실천방안을 강구하게 만든다.

3. 선거보도감시 모니터 활동의 등장과 전개

선거보도를 대상으로 감시 및 개선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사례는 1980년대 중반 ‘KBS-TV시청료거부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5년 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방송뉴스의 노골적인 왜곡편파보도에 대한 항의로 전개된 ‘시청료거부운동’은 ‘KBS-TV시청료거부 범시민운동’으로 확대됐고, 여성연합 산하 TV뉴스 모니터팀이 KBS와 MBC 양사의 뉴스 프로그램을 모니터했다. 서울YMCA TV모니터클럽도 1987년 대통령선거, 1988년 국회의원선거, 1991년 지방자치제 및 광역의회 선거의 보도를 모니터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방송보도 모니터 활동이 단체간 연대와 협력의 형태로 조직화, 본격화한 것은 1992년 2월 20일 결성된 ‘선거보도감시연대회’였다.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는 선거기간 동안 23회 신문과 방송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고, 자체 제작한 신문과 스티커, 안내책자를 배포하며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이들은 KBS와 MBC 방송사를 항의 방문하여 언론수용자운동의 지평을 훨씬 넓혀 놓았다(김기태, 1992).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탄생에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이하 민언협)의 노선 전환이 계기가 됐다. 민언협은 1991년 시민언론운동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언론운동 방향을 모색했는데,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학교’였다. 언론학교는 시민들이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언론을 읽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언론개혁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언론학교 개설 이후 모니터강좌도 운영됐는데, 당시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고, 분석 방법이 정교하지 못하며, 모니터 결과를 공개하고 발표할 수 있는 매체 자체가 적은 탓에 언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았다. 이때 선거와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시민 중심의 자발적인 선거보도감시 활동을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됐다.

1992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시기(이하 92년 총선)에 민언협, KNCC언론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여론연구회(한국언론정보학회 전신), 중앙언론연구회 등 5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14대 총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를 출범시켰다. 3개 TV방송 및 5개 라디오 방송뉴스, 그리고 9개 중앙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모니터했다. 1992년 총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슬로건은 "공정한 선거보도는 국민의 힘으로", "선거보도감시는 국민의 임무"로, '올바른 선거보도를 격려하는 한편 편파 왜곡, 불공정 보도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이의 시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내세웠다.

선거보도 모니터 활동에 언론학교를 수료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선거보도감시 활동은 시민 언론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조직화하게 했다. 1992년 9월 '제14대 대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가 꾸러졌다. 대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는 총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의 참여 단체를 포함해 카톨릭매스컴위원회와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등 종교계까지 확대됐으며, 지역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모니터 활동이 더해지면서 15개 지역 일간지를 모니터대상 범위로 하고 74차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언론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언론개혁 문제가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언론운동에 참여하는 계층도 학생, 일반 시민, 주부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지역 단위로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생겨나는 동인이 되었고, 언론개혁을 위해 상시적으로 연대하는 시민언론운동이 본격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한국기자협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는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1995년 6월)를 맞아 △풀뿌리민주주의 선도 △정책중심 의제설정 △공정보도 △선거감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3단체 공동의 '지자체 선거보도제작준칙'(1995.5.15)을 마련해 발표했다.

15대 국회의원(1996년 4월) 선거에 앞서 KBS는 단독으로 '선거방송 보도준칙'을 제정하고, 균등성, 동일성, 공정성을 내세웠다. 1997년 제15대 대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는 '공정방송 기준안'을 마련해 공표했다. 이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양적 공정성을 기준으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각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에게 동등한 시간을 부여하고, 동등 시간 의무를 순수 뉴스 프로그램 외에 대담, 토론, 인터뷰,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에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질적 공정성으로는 정치적 중립, 외부 압력 배제, 기사작성의 균형, 반론기회 제공, 그리고 제작기술상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방송 모니터는 김영삼·김대중·정주영 대선 후보의 육성 직접 인용 보도시간, 육성인용 발언 내용의 적절성, 기자 혹은 앵커의 리포트 내용을 양적·질적으로 비교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보도 편향성 시비가 분석 대상이었고 언론사의 이념 편향성에 따라 지지후보가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김원용 외, 1997, 38-39쪽 참조).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 412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언론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일일모니터를 포함해 기사에 대한 항의전화, 항의메일 보내기, 항의 시위, 규탄대회 등도 계획했다. 왜곡편파 보도에 대한 실명 비판 운동, 낙천낙선운동 왜곡보도 전시회, 가장 불공정한 언론사 선정, 지역주의 조장 언론사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대응활동을 펼쳤다(최중숙, 2000. 3. 16).

2002년 대선을 맞아 공정선거를 위한 미디어대책 활동에 주력할 시민운동연대기구로 '2002대선미디어 공정선거국민연대'가 민언련, 언론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전국 102개 시민·노동·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결성됐다(김철관, 2002.9.18.). 당시 미디어국민연대는 33개 방송사와 10개 중앙일간지 편집국장에게 선거보도준칙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는데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MBC, 광주방송, 대전방송이 선거보도준칙을 제정했다고 답변했다(신미희, 2002.5.3.).

또한 미디어감시연대는 무책임한 양비양론적 보도, 지역감정 조장 보도, 정치불신 조장 보도, 선정적 경마식 보도, 유권자 무시 보도, 불공정·편파 보도, 흑색선전 및 후보 비방 보도에 대해 집중적인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뉴스가 선정적 보도태도와 후보자 따라가기식 보도와 같은 과거 관행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을 포함한 5~6개 인터넷 매체가 모니터 대상이었다. 참여정치와 미디어 정치라는 새로운 문화를 제대로 진단하거나 사회의제화하는 역할에 미디어가 소극적으로 대했다는 평가가 총평가 토론회에서 언급됐다.

한국언론학회(2002)는 '언론학회 선거보도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보다 좋은 선거보도를 위한 체크 리스트" 아래 유권자에게 필요한 이슈와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도할 것과 사실 검증을 강조했다. 방송보도의 공정성과 TV토론 보도의 유의점, 여론조사 보도시 주의할 내용이 담겼다. 선거 의미와 참여 의의를 강조하고, 질적인 편파성을 극복할 것, 부정적 보도와 전략적 용어 사용·비과학적 설명·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를 줄일 것, 추측성 보도와 기자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윤색하지 말 것 등을 포함했다.

2004 총선을 앞두고 결성된 '2004 총선미디어감시국민연대'는 민언련, 언론노조,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222개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가 참여했고 방송, 신문, 인터넷, 보도사진 모니터를 진행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언련과 8개 지역민언련을 중심으로 '2006년 5.31지방선거 선거보도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언련과 8개 지역민언련, 참언론대구시민연대가 참여한 '6.2지방선거모니터단'을 발족해 활동했다. 이 시기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모니터단은 정치적 냉소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경계 대상으로 삼았고, 방송뉴스의 선거보도감시가 중시되었다.

2007년 대선에서는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언론노조 등 4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07대선미디어연대'가 8월 발족했다. 대선미디어연대는 출범 당시 "2002년 대선미디어국민연대의 활동이 신문과 방송에 대한 감시 기능에 한정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미디어 감시기능과 미디어정책 제안 기능의 통합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기존 신문과 방송의 범위를 넘어 인터넷신문과 포털, 통신사, 보도전문채널로 감시 범위와 영역을 확장했다. 또한 민언련과 8개 지역민언련,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그해 10월 '2007 대선 민언련 모니터단'을 구성해 감시활동을 펼쳤다. 민언련 모니터단은 기존 선거보도감시 활동이 일부 보수신문이 만들어낸 의제를 쫓아가는 데 급급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 모니터와 정책의제 중심 모니터를 할 것 △정기적 선거보도모니터보다는 기획모니터를 발표할 것 △대선시민연대 '삶의

질 정책운동본부'와 연대해 평화통일, 환경, 경제, 교육, 복지 관련 정책보도를 집중 모니터하고 의제화할 것 △전국 단위 모니터가 실시되는 만큼 각 지역 미디어에 대한 선거감시가 더욱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종합일간지와 지상파방송의 지역의제까지도 모니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보도를 감시할 '2008총선미디어연대'가 출범했다. 전국 57개 시민·사회·언론단체로 구성된 '2008총선미디어연대' 활동부터는 언론인 현업단체도 모니터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SBS노보>를 통해 총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MBC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도 총선 방송보도 일일 모니터 체제를 가동해 자사 보도를 점검했다. '2008총선미디어연대'는 선거 관련 시사, 토론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추가했다. 특히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보도준칙을 공표했는데, 언론계가 2016년에서야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을 제정한 것에 비해 8년 이른 것이었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1,000여개 시민·사회·언론단체 등은 2월 9일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를 발족해 "능동적이고 지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을 선언했다. 민언련은 총선유권자네트워크 활동에 이어 2월 27일 7개 지역민언련, 참언론대구시민연대와 함께 '4.11 총선 선거보도 민언련 모니터단'을 구성해 주요 신문·지상파3사·종편 모니터링, 선거보도감시준칙 발표,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운동 연대 등을 중심으로 펼쳤다.

민언련은 이어 제18대 대선을 앞둔 10월 22일 7개 지역민언련과 함께 '2012 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을 결성하고 5개 일간지·방송3사·지역신문 및 방송을 아우르는 대선보도 감시에 돌입했다. 일일모니터와 주간모니터 외에도 140자 브리핑, 나쁜보도 영상제작을 추진했다. 기존 대선보도감시준칙을 보강해 △정치냉소주의를 확산시키는 선거보도감시 △지역감정 부추기는 선거보도감시 △선정적인 경마식 보도감시 △흑색선전, 의혹 폭로 등 부정적 선거보도감시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보도 지향 △시민사회의 유권자 운동 적극적 보도 △신진, 소수, 진보 후보를 충분히 보도할 것 등 8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더불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행언련)이 주관하는 '시민감시단'과 연계를 통해 포털뉴스와 조중동방송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해 문제보도를 집중모니터했다.

'2012 대선보도 민언련모니터단'은 이듬해인 2013년 1월 총평가보고서를 통해 신문과 방송으로 나눠 최악의 보도를 선정했다. 방송 부문에서는 후보에게 제대로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노무현 대통령 NLL발언 관련 보도, 영상 편집 등 편파보도 사례와 박근혜 후보 노골적인 띄우기 및 선정적인 경마식 보도를 지적했다. 신문 부문에서는 △이중잣대 △은폐·침묵 △의제 왜곡 및 호도 △분열 조장 △물타기 △지역주의 조장 △네거티브 △검증 포기 △색깔론·북풍몰이 △공약 불이행 중용을 꼽았다.

2014년 5.13 지방선거의 경우 민언련과 언론노조가 공동 대응하기로 하면서 '2014 지방선거 공정선거 보도감시단'을 구성해 모두 17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언련과 지역민언련은 신문과 방송, 종편 시사프로그램 모니터 활동을 전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촛불시위로 조기에 치러진 2017년 대선의 경우 민언련, 언론노조,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 18개 단체가 참여해 그해 3월 20일 '2017 대선미디어감시연대'를 구성했다. '2017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신문과 방송 선거보도의 양적, 질적 분석을 구분해 모니터하고, 종편 시사토크쇼 모니터, 페이스북과 언론사별 SNS 모니터, 포털 모바일뉴스 모니터, 경제지 선거보도 모니터, 뉴스통신사인 연합 뉴스와 뉴시스 대선페이지 모니터로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종편 시사토크쇼 화면 하단의 자막이 출연자 발언과 무관하거나 종편 방송사가 전하고 싶은 내용 위주로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양적 분석을 통해 증명했다. 자막 내용만으로도 문재인 후보에게 부정적인 자막이 가장 많고, 긍정적 자막은 안철수 후보가 가장 많아 편파적 보도행태로 지적됐다. 언론사 페이스북 계정을 모니터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2017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42일간 13개 언론사 페이스북 공식 뉴스페이지 19,710개를 수집·분석해 언론사 페이스북 콘텐츠의 편집 원칙을 정립하고 데스크킹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결성된 '2018 전국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는 저녁종합뉴스 방송보도를 중심으로 양적 분석 모니터를 진행하였고 '4무(無)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보도 건수 자체가 적고, 후보자 자질이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비교검증, 실효성검증, 쟁점 검증이 제한적이며, 군소정당 후보자가 보이지 않고, 교육감선거 방송보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2020년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결성된 '2020 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기존 선거보도감시준칙을 선거보도 제작준칙으로 발전시켰다. 단순히 어떤 보도를 하지 말자는 차원을 넘어 언론인들이 선거보도를 제작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모니터 활동은 양적 분석과 좋은·나쁜보도 선정 등 정기 모니터와 일일 촌평 '일간 기고쓰' 콘텐츠로 이원화하여 대중 접근성을 높이려 시도했다.

2021년에는 예외적으로 보궐선거에 대한 미디어감시연대가 결성되기도 했다. 2020년 잇달아 벌어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비위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 데 따른 것이다. 민언련과 부산민언련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 모니터를 진행했으며, 언론노조에서는 포털뉴스 모니터를 시도하여 포털뉴스 알고리즘이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뉴스를 구조적으로 메인에 배치하도록 만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가장 최근 결성된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기존 미디어와 포털뉴스 모니터를 이어가는 한편 유튜브 모니터에 대한 전문적 접근을 시도했다. 여론조사 단순 받아쓰기와 냉소주의 조장 보도가 절정을 이룸에 따라 비판의 초점도 여론조사 보도에 집중됐다. 정치권에서 단일화 논의가 언급되기도 전에 언론이 '단일화는 의무이며 당위'라며 나선 신문 칼럼과 방송 시사토론 등 편파보도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후보자와 정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포함해 진보와 보수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24개)을 모니터한 유튜브 모니터 팀은 양적·질적 평가를 통해 시사유튜브 생태계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했다.

4. 시민의 선거보도감시 활동 의미와 앞으로 과제

앞서 보았듯 선거보도감시는 선거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지난 30년간 전개된 시민들의 선거보도감시 운동은 유권자를 위한 보다 나은 선거보도를 생산하도록 자극하고, 뉴스 이용자가 선거보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했다. 정치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민 스스로 직간접 정치참여를 격려해 시민 간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양을 증가시켰다. 언론 모니터 활동은 선거보도감시 활동을 통해 상시화·전문화되었고,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의 운동영역을 결합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정치운동을 만들어냈다.

선거보도감시와 모니터 활동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질문은 “누구를 위한 모니터 활동인가?”일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보도감시와 모니터 활동의 과제를 △필요성 △활동 범위 △활동 방식 △한계와 문제점 해결 등 차원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p>■ 왜 선거보도감시가 필요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보도감시의 필요성 - 선거보도에서 문제 있는 보도의 가치 판단 	<p>■ 선거보도감시와 모니터 활동은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보도 모니터 활동의 대상과 범위 - 선거보도 모니터 활동의 결과 형태와 공개 방식
<p>■ 선거보도감시와 모니터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보도 모니터 활동의 조직화, 연대 방식, 자원 - 선거보도 모니터 활동의 공표, 시민의 참여 범위 	<p>■ 선거보도감시와 모니터 활동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보도감시와 모니터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정의(보도준칙 기준 등) - 선거보도에서 문제 있는 보도의 서로 다른 견해 조정 - 논의구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규칙 마련 - 선거보도감시와 모니터 활동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표, 그리고 참여 기회 확대

즉 선거보도감시의 목적과 대상, 내용과 활용 효과는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 방식과 절차를 공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모니터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유포와 의견수렴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 활동 참여의 문턱을 낮춰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혁남 (1999). 텔레비전의 15대 대통령선거 보도분석. <한국언론학보>, 43권 5호, 5~44.
- 김기태 (1992). 선거보도감시운동의 평가와 실천과제. <한국언론정보학보>, 2권, 57-90.
- 김선호·백영민·장경은 (2021). <선거와 미디어: 유권자의 관점에서>(연구서 2021-09).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원용 외 (1997). <한국선거보도연구: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게 보도되었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철관 (2002, 9, 18). 미디어국민연대 출범...18일 오전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연련, 참여연대 등 전국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 <오마이뉴스>.
- 김춘식 (2022). 대통령선거보도, 저널리즘 기본원칙 및 민주주의 기능의 상실.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제주언론학회 공동세미나(2022, 2, 8). 제20대 대선보도점검 세미나 발제문. 제주: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
- 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대통령 선거보도의 기사품질, 심층성, 공공성의 변화. <방송문화연구>, 26권 2호, 33-66.
- 배정근 (2017).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취재기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1권 3호, 42-77.
- 백선기 (1997). <한국 선거보도의 기호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백선기 (2007). 대통령 입후보자에 대한 보도와 언론의 편향성. <언론중재>, 2007 여름호, 4-21.
- 송현주 (2021). '미디어화'를 통한 정치-언론 관계의 이론화: 조항제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2020). <언론과 사회>, 29권 1호, 152-179.
- 신미희 (2002, 5, 30). 선거보도준칙 제정 증가세. <미디어오늘>.
- 윤성이 (2015). 무엇이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는가. <황해문화>, 40-58.
- 윤영철 (1991). 언론의 현실 재구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신문의 남북관계 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26호, 251-286.
- 이준웅·조항제·송현주·정준희 (2010). 한국 사회 매체 체계의 특성: '민주화 이행모형'의 제안. <커뮤니케이션이론>, 6권 1호, 87-143.
- 조항제 (2003).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권력>. 서울: 한울아카데미.
- 조항제 (2017a).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디어: 민주화 이후 30년(3-37). 언론과 사회 기획세미나(2017년 5월 12일) 발제문.
- 조항제 (2017b).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 1987~2017. <언론과 사회>, 25권 3호, 11-78.
- 조연하·배진아·이영주 (2007). 시청자 운동에 대한 단체 활동가의 인식과 단체 활동의 관련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201-228.
- 최영재 (2005). 언론의 정파성과 대통령 보도, 그리고 언론자유. <언론과 법>, 4권 2호, 49-80.
- 최장집 (1994).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언론과 사회>. 6권, 40-64.
- 최종숙 (2000, 3, 16). 2000년 총선시민연대 '언론대책특위' 발족. <미디어오늘>.
- 한국언론연구원 (1993). <제3회 전국기자 직업의식 조사: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한국언론연구원 (1995). <제4회 전국기자 직업의식 조사: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한국언론연구원 (1997). <제5회 전국기자 직업의식 조사: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한국언론연구원 (1999). <제6회 전국기자 직업의식 조사: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2007 대선민언련모니터단 활동 백서>
- <2008 총선미디어연대 활동 백서>
- <2012 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총평가보고서>
- <2014 지방선거 공정선거보도감시단 활동 백서>
- <2017 대선미디어감시연대 최종평가토론회> 발제문
- <2018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 긴급토론회> 발제문
- <2020 총선미디어시민연대>
- <2021 서울부산보궐선거 미디어감시연대 보도백서>(발간 예정)
-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 총괄평가토론회> '실패인가 퇴화인가' 제20대 대선보도 과제와 해법 발제문

충북지역 대선보도, 무엇을 남겼나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활동가)

시작하며

대선을 맞아 충북 지역언론들도 대선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도는 공약을 정리해 전하거나 정당의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후보 동정 보도, 거대양당 중심의 보도, 지역연고주의 등 과거 보도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양상을 보였다.

방송은 전반적으로 기획보도를 통해 공약 전달에는 충실했지만 공약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공약을 비교적 충실히 전달했으나 여전히 '받아쓰기 보도'에 한정되어 있을 뿐, 시민의 판단이나 전문가의 검증이 전혀 없이 후보자의 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보도에 그쳤다. 신문은 대부분 공약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대선후보의 주요 의혹에 대해서 지역의 관점으로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두 후보의 지역연고를 부각시켜 충청의 아들과 사위라는 표현을 관용구처럼 썼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충북의 선택이 이번에도 맞았다며 “백발백중”이었다고 관습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선거의 의미나 충북이 왜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찾기 어려웠다.

이런 관점에서 언론이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느냐는 기준으로 본다면 충북지역 언론의 선거보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볼 수 있다. 유권자가 정보 습득의 한계로 공약의 이행 가능성이나 실효성을 판단하기 힘들 때, 분석이나 검증을 통해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특별취재 없는 ‘특별취재팀’

선거 때마다 언론들은 특별취재팀을 꾸리지만 의례적인 수준에 그친다. 기존의 기자들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인데 기획보도가 타사에 비해 차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라인은 ‘특별취재팀’이라고 되어있지만 모든 신문사의 특별취재팀에서 거의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기사들로만 채워졌기 때문이다. 신문사 이름만 가려놓으면 어느 곳의 신문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다.

통신사 기사를 어조사만 바꾼 수준의 보도도 있었다. 2월 7일 중부매일 6면 <양강 구도 속 판세 안갯

속… 부동산 움직임 촉각)은 연합뉴스의 <정권 재창출이나 교체나…대세론 없는 대혼전 '한달 승부' 돌입>을 어미만 살짝 바꾸는 식으로 재가공해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지면에 실었다. “각각 ‘충청 사위’, ‘충청 아들’을 자처하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에 대한 충청권의 표심도 주목된다”는 단 한 문장만 첨언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신문사에서든 직접 취재한 선거 기사는 볼 수 없었다.

그 밖에 연합뉴스에서 ‘퍼온’ 기사도 대부분 후보의 동정이나 정당 이벤트를 주제로 한 기사였다. 시민 사회 및 유권자 의견이 담긴 기사는 사진 기사를 제외하고 2월 10일 동양일보 4면 <영동 ‘생애 첫 NEW권자’ 윤석열 지지 선언>, 충북일보 6면 <영동 생애최초 유권자연맹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 두 건이 전부였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았으나 유권자 중심의 의제를 발굴한 선거보도라고 보기엔 힘들다.

정우택 “서민 주거안정 대책 추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DTI 우대비를 확대 - 취약세 감면 대상 확대 등

정우택(사천 국회의원) 충청남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7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주택가격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LTV·DTI 우대비를 확대하고 1주택 보유 기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기간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고 임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서민 부담을 낮춘다.

전월세 대책으로 공공임대·공공

지원 민간임대 확대, 장기임대 주택 분양권 관련 분담금 상한 적용,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예비후보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멀어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다시 회복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정뉴스 기자 jason@times.co.kr

“서민 주거권 보장”

정우택 청주 상당 예비후보 주거 사다리 회복 공약



국회의원 정우택(09·사천)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7일 주거사다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회복할 공약했다.

정우택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주택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LTV·DTI 우대비를 확대 및 DSR 규제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멀어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다시 회복되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동남·방서지구 AI건강증진센터 건립”

윤갑근 “운동만 즐기는 곳 아닌 건강상태 체크할 수 있어”

윤갑근(사천 국회의원) 충청남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7일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동남·방서지구에 AI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해 체육시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에 따르면 AI건강증진센터는 단순한 운동만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첨단 장비와 개인 맞춤형 운동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갖춰진다.

세부적으로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비롯해 테드민턴, 농구, 배구, 탁구, 실내골라 등 다양한 운동을 이용할 수 있는 초대형 다목적체육

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윤 예비후보는 “동남·방서지구는 최근 대규모 공영도로 광동주 택이 들어선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문화·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AI건강증진센터 건립이 추진되면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뉴스 기자 jason@times.co.kr

윤갑근 청주 상당 예비후보 동남·방서지구에 건립 공약



국회의원 윤갑근(09·사천)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7일 동남·방서지구 인공체육(AI)건강증진센터 건립을 공약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남·방서지구는 최근 대규모 공공도로가 들어선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문화,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AI건강증진센터는 단순히 운동만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계획”이라며 “AI건강증진센터는 수영장을 비롯한 청주시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AI 진단과 함께 전문 체육인들을 배치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편집·이명경기자

정우택 “서민 주거 사다리 회복” 윤갑근 “AI 건강증진센터 건립”

국회의원 청주 상당 재선거 예비후보 공약 발표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로 유력한 국회의원 정우택(충북도당위원장) 예비후보와 윤갑근(전 충북도당위원장) 예비후보가 시민 주거안정향상과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우택 예비후보는 7일 무주에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전·월세 시장 안정

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우택 예비후보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멀어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다시 회복되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공공주택 공급·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정우택, 서민 주거사다리 회복



정우택(09·국회의원) 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7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회복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장기임대주택 분담금 상한 적용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그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고, 임대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서민들의 경제적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총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환 / 특별취재팀

동남·방서지구 AI건강증진센터 건립

윤갑근,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윤갑근(07·국회의원) 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7일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동남·방서지구에 AI건강증진센터 건립으로 체육시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동남·방서지구는 최근 대규모 공영도로가 들어선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문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며 “AI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추진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세환 / 특별취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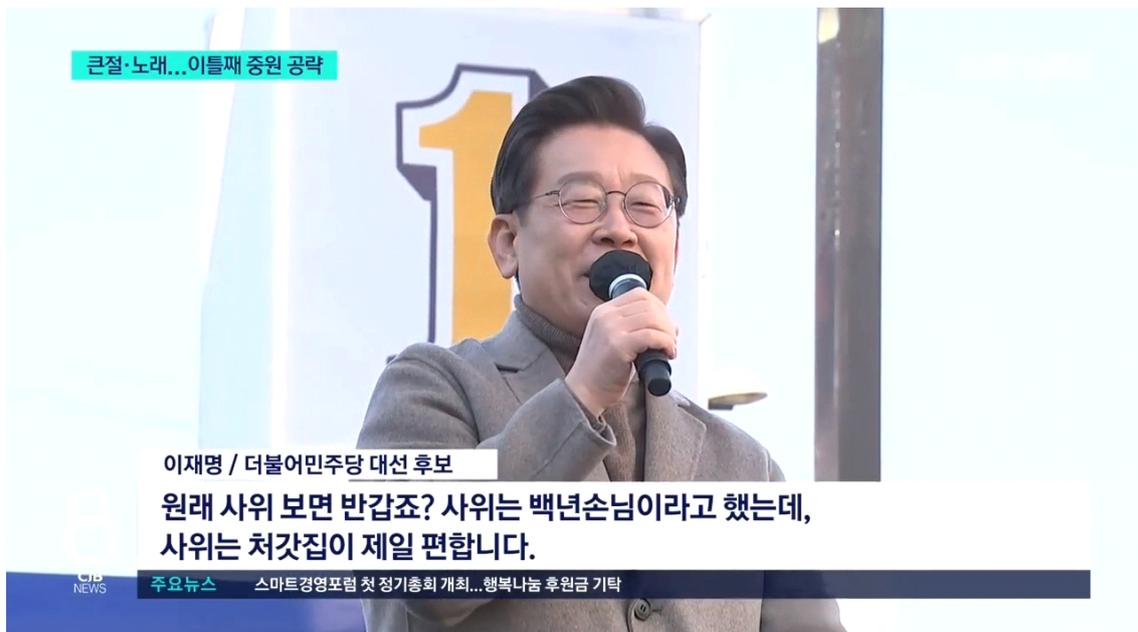
수영, 체력단련, 테드민턴, 농구, 배구, 탁구, 실내골라 등 다양한 운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체육인들을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 예비후보는 “동남·방서지구는 최근 대규모 공공도로가 들어선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문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며 “AI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추진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세환 / 특별취재팀

그림1. 2022년 2월 8일 충북지역 모니터 매체 신문사 정우택, 윤갑근 청주 상당 재보궐 예비후보 공약 보도

충청의 아들, 사위 강조한 보도 많았다

"충청의 아들", "충청의 사위" 구태의연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선거보도도 상당수 발견됐다. "충북의 아들", "충청의 사위"부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칭하는 "충북의 딸"까지 등장했다. 모니터 대상 4사의 경우 5일간(2월 21일-25일) 평균 3.5건의 지역주의 강조 보도가 발견됐다. 각 매체마다 3건 혹은 4건으로 약속이라도 한 듯 보도 건수마저 비슷했다.

CJB청주방송 2월 24일 리포트 <큰절하고 노래 부른 '충청사위' 이재명>에서는 아예 제목부터 '사위'라는 단어를 썼다. 내용은 더욱 적나라하다. "원래 사위 보면 반갑죠?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했는데, 사위는 처갓집이 제일 편합니다."라는 이 후보의 인연 강조 발언 장면을 보도에 그대로 옮겼다. 전체 리포트 분량 중 선거 공약 및 홍보 관련 내용이 단 두 줄 뿐, '마을주민들이 씨암탉 대신 달걀을 선물했다'라는 등 선거 유세인지 처가댁 방문인지 헷갈릴 정도의 내용이 리포트로 담겼다.



MBC충북도 같은날 보도한 리포트 역시 제목 <이재명 1박 2일 충북 유세.. 처가 충주 공약>에서부터 이재명 후보의 처가가 충주임을 드러냈다. MBC 보도가 CJB보다는 덜 노골적이었지만, "장인의 고향", "충청의 사위" 등 혈연을 강조하는 단어가 수차례 등장한 건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 리포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행보도 함께 거론했는데, 윤 후보 역시 "부친의 고향"이 충남인 점을 내세웠으며 혈연에 기반한 지역 연고를 강조했다.

대선후보가 지역 유세마다 사돈의 팔촌 연고까지 꼬집어내어 혈연, 지연을 앞세우며 구태의연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그간 솔하게 지적돼온 부분이다. 이를 비판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

의 잘못도 크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5조(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보도)는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지지 또는 반대를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매 선거마다 언론은 이와 같은 보도를 반복 생산한다. 유권자의 알 권리는 후보와 지역의 연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공약임을 언론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단 한 차례 여론조사로 모든 걸?!

이번 대선에서 유독 여론조사가 많이 시행되었고, 언론들도 앞다퉈 보도를 쏟아냈다. 지역언론들은 비용 문제 등으로 거의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 지역에선 유일하게 KBS충북이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KBS는 모니터 기간안에 총 15건의 리포트와 대담으로 여론조사 결과발표를 했으며, KBS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신문들은 그때 그때 충실히 받아 확대 재생산시켰다.

KBS충북은 모니터기간에 15건(리포트 14건, 스튜디오 1건)의 보도를 통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제는 대선 후보·충북도지사 후보의 지지율 조사부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조사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KBS충북은 하루 리포트 보도량의 절반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데 썼고, 조사 결과 발표 보도가 되는 동안 선거 관련 취재 기사는 없었다. 공영방송이 여론조사 기관에 취재를 의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여론조사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재원 문제로 여론조사를 꾸준히 실시하기 어려워 단 한차례 실시한 여론조사로 여론을 결정지어 버린다는 맹점이 반복되고 있다. 조사 방

법이나 대상, 기간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여론조사 아닌가. 더 위험한 것은 LNG발전소 건립처럼 정교한 조사와 해석이 필요한 현안을 선거용 찬반 조사로 다루는 행태다.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주제를 선정할 때 언론은 이 같은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이분법적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지역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면 안 된다.

후보자간 대결 구도나 네거티브 강조 보도 많아

후보자 간 대결구도나 네거티브를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보도도 많았다. 언론은 별다른 고민 없이 관성적으로 전쟁용어를 선거보도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 같은 언론의 습관은 선거를 승자-패자를 결정하는 전쟁이나 싸움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선거의 중심은 민의가 반영된 유권자의 선택이지 승자나 패자가 된 정치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후보들의 함량 미달 발언이나 상대 후보를 무분별하게 헐뜯는 언사를 그대로 기사에 옮겨내어 네거티브전의 확산에 역할을 하는 보도 행태도 지양해야 한다.



MBC충북에서 15일(화)에 나온 <"정책도 모른다"vs"좌파정권 종식" 선거전 돌입> 보도는 제목부터 후보들의 네거티브전을 그대로 중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리포트에서는 이장섭 민주당 충북선대위원장의 “정권의 비판만 일삼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상주 아닌 상주가 될지도 모릅니다”라는 발언과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선대위원장의 “좌절과 고통을 줬던 이 문재인 정권에 이제 좌파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야 될 때가 바로 다가왔습니다”라는 발언이 전파를 탔다.

같은 날 KBS충북 <충북 정치권 선거운동 시작…대선 체제 돌입> 보도도 거의 동일한 멘트가 들어갔다. 불필요한 네거티브전을 벌이는 정치인들의 말을 언론이 그대로 보도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보도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이다. 언론은 정치인이 하는 발언의 적절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부분은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 충북지역 대선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들

앞서도 말했듯이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언론은 별다른 특이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별취재팀은 꾸렸지만 특별취재를 하지는 않았고, 돈 들여 한 여론조사를 리포트 15건으로 선거기간 내내 우려먹기도 했다. 지역과의 연고를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거나 충북의 민심이 대선을 결정짓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대선에서 충북지역의 존재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이번 지역언론의 대선 보도는 심각한 취재인력의 부족, 관행처럼 굳어진 선거보도 패턴, 팩트체크 과정을 거치지 않는 후보들의 기사형 보도자료, 기계적 중립으로 나열만 하다 그치는 정당의 이벤트 중계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 모니터 기간: 2022년 2월 7일(월) ~ 3월 8일(화)
- 모니터 매체
- 신문 : 동양일보, 충청타임즈, 충북일보, 중부매일
- 방송 : KBS충북(뉴스7 or 뉴스9), MBC충북(뉴스데스크 충북), CJB청주방송(CJB 8뉴스)

경남지역언론은 20대 대선을 어떻게 보도했나

노희승(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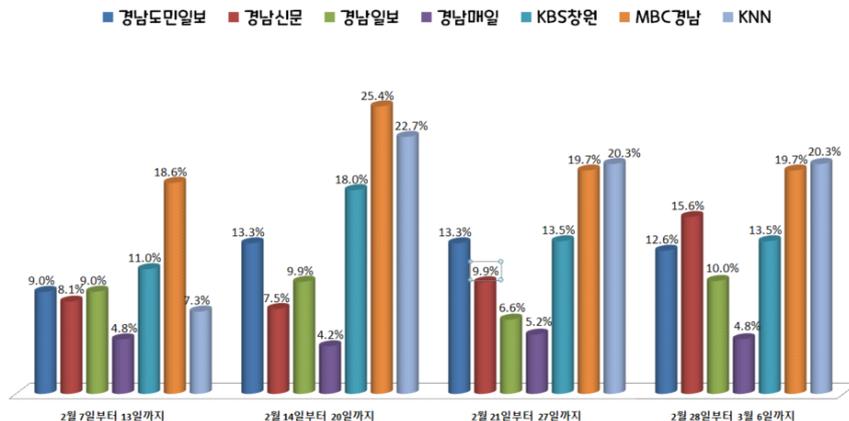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선거권이다. 선거권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선거기간 지역 사회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지역언론은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언론은 외면받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한다.

지역언론은 다양한 정책의제와 함께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가 있다.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후보자의 혼란스러운 의혹에 대해 사실 검증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 또한 언론의 역할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유권자는 다양한 언론을 통해 선거정보를 접하게 된다. 특히 지역 유권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지역언론에서 후보자의 지역정책에 대한 발언이나 정책·공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수식어 앞에 후보자와 지역 유권자 간에 경남 지역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 후보 동정, 정당 이벤트 가장 많이 보도

경남 언론사별 대선보도 비율



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 경남지부는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

남매일, KBS창원총국, MBC경남, KNN의 7개 언론사를 대상 매체로 총 4건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방송에서 대선 관련 보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기사 915건 중 159건 보도되었으며 17.4% 비율이다. MBC경남은 282건 중 61건(21.6%)으로 보도량이 가장 많았으며, KNN은 245건 중 43건(17.6%), KBS창원총국은 388건 중 55건(14.2%) 순으로 보도량이 나타났다.

모니터 기간 동안 각 방송사의 보도량은 KBS창원총국 11~18%, MBC경남 18.6~25.4%, KNN 7.3~22.7%로 나타나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보도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경남지역 방송 3사의 모니터 기간 동안 보도유형별 분석을 해 보면 리포트 61건, 단신 72건, 기획/연재 24건, 인터뷰/대담 1건 보도했다. KBS창원총국은 '경남 공약 분석'이라는 기획 기사를 8건 보도했고, MBC경남은 '대선 공약 검증' 기획 기사 8건, '지방자치 특별 대담' 기획 기사 2건, KNN은 '대선후보 공약 점검' 기획 기사 6건을 보도했다.

방송의 대선보도의 주제를 분석해 보면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정책 및 공약', '후보 동정 및 정당 이벤트'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방송에서는 대선 후보자가 부산이나 경남지역에서 유세하는 현장을 주로 보도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보도매체	KBS창원	MBC경남	KNN	합계
정책 및 공약	12	18	10	40
	21.8%	29.5%	23.3%	25.2%
의혹, 논란, 공방	4	3	1	8
	7.3%	4.9%	2.3%	5.0%
정당, 후보의 선거전략	7	1	1	9
	12.7%	1.6%	2.3%	5.7%
선거 판세 및 여론조사	3	4	6	13
	5.5%	6.6%	14.0%	8.2%
후보 동정 및 정당 이벤트	11	16	13	40
	20.0%	26.2%	30.2%	25.2%
시민사회 및 유권자 의견	3	7	4	14
	5.5%	11.5%	9.3%	8.8%
선관위/경찰청 안내 사항	10	9	5	24
	18.2%	14.8%	11.6%	15.1%
선거유세 사건/사고	2	1	1	4
	3.6%	1.6%	2.3%	2.5%
지방선거 관련	2	1	0	3
	3.6%	1.6%	0.0%	1.9%
기타	1	1	2	4
	1.8%	1.6%	4.7%	2.5%

신문의 대선 관련 보도는 전체기사 6,746건 중 601건 보도되었으며, 8.9% 비율이다. 경남도민일보는 1695건 중 204건(12.0%)으로 보도량이 가장 많았고, 경남신문은 1772건 중 175건(9.9%), 경남일보는 1635건 중 144건(8.8%)이며, 경남매일 1644건 중 78건(4.7%)으로 보도량이 가장 적었다.

각 신문의 모니터 기간 동안 보도량은 경남도민일보 9~12.6%, 경남일보 6.6~10%, 경남매일 4.2~5.2%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경남신문은 7.5~15.6%로 대선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모니터 기간 동안 경남지역 신문 4사의 전체 대선 관련 기사 601건을 보도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스트레이트 357건, 기획/연재 62건, 칼럼 108건, 사설 29건, 사진 33건, 인터뷰 3건, 기타(신문사 알림 등) 9건으로 나타났다. 기획/연재 기사를 가장 많이 보도한 곳은 경남신문으로 34건(19.4%)이며, '경남 민심 들어보니', '대선후보 경남공약 톺아보기', '창간 76주년 대선후보 공약비교', '한신협 대선 3차 여론조사' 등을 보도했다. 경남도민일보는 26건(12.7%)의 기획/연재 기사를 보도했다. '대선후보 정책분석', '유권자가 묻다 경남 현안 해법', '소수정당 후보정책', '오늘의 시민, 청소년 유권자', '대신협 '지역을 묻다' 등의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기획/연재 기사가 거의 없었던 경남일보는 2건이며 경남매일은 기획기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남지역 신문 4사는 대선보도의 주제를 분석해 본 결과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후보 동정 및 정당 이벤트'와 '정책 및 공약' 기사를 가장 많이 보도했다.

보도매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매일	합계
정책 및 공약	60	43	22	11	136
	29.4%	24.6%	15.3%	14.1%	22.6%
의혹, 논란, 공방	26	12	24	5	67
	12.7%	6.9%	16.7%	6.4%	11.1%
정당, 후보의 선거전략	10	15	21	4	50
	4.9%	8.6%	14.6%	5.1%	8.3%
선거판세 및 여론조사	12	22	16	5	55
	5.9%	12.6%	11.1%	6.4%	9.2%
후보 동정 및 정당 이벤트	20	25	22	24	91
	9.8%	14.3%	15.3%	30.8%	15.1%
시민사회 및 유권자 의견	38	22	10	9	79
	18.6%	12.6%	6.9%	11.5%	13.1%
선관위/경찰청 안내 사항	15	21	16	9	61
	7.4%	12.0%	11.1%	11.5%	10.1%
선거유세 사건/사고	4	1	1	2	8
	2.0%	0.6%	0.7%	2.6%	1.3%
지방선거 관련	7	4	2	5	18
	3.4%	2.3%	1.4%	6.4%	3.0%
기타 (신문사알림, 대선관련내용을 잠깐언급한기사 등)	12	10	10	5	37
	5.9%	5.7%	6.9%	6.4%	6.2%

■ 정책 비현실성 비판하면서도 검증 부족, 쏟아지는 정책 전달에만 초점

방송의 정책보도는 정책의 단순 나열형 기사,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해설형 기사, 정책 검증형 기사, 유권자나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보도에서는 후보자들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해서 리포트해주는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전문가의 정책 검증이나 후보자와 유권자를 잇는 공론장 역할이 부족했다.

	정책 단순 나열	시민사회 정책 제안·비판	정책 해설 보도	정책 검증	합계
경남신문	2	2	2	2	8
경남도민일보	1	3	3	10	17
경남일보	3	3	-	1	7
경남매일	2	1	1	-	4
KBS창원	6	2	-	2	10
MBC경남	10	3	-	-	13
KNN	3	0	-	1	4
합계	27	14	6	16	63

표 13 2022년 2월 7~20일까지 언론사별 대선 정책 보도 분석표

KBS창원총국은 4대 정당 후보의 정책을 소개하고 정리·비교해주는 방식으로 보도했다. 유권자의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과 전문가의 짧은 인터뷰를 통한 검증을 반영했지만 일부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배경 설명’, ‘비현실성 비판’ 수준의 정책 검증에 불과했다.

MBC경남의 기획보도 역시 정책을 정리·비교하고 배경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이었다. 차이점은 소수정당인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공약도 4대 정당과 함께 비교한 기사가 있었다. 하지만 정책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검증은 부족했다.

KNN은 선거가 가까이 갈수록 정책보도량이 증가했다. 배경 설명과 함께 양대정당 후보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비교하는 기사가 대체적으로 많았다. 정의당, 국민의당 정책은 잠깐 언급했고, 다른 소수정당은 후보의 정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신문은 언론사별로 편차가 심했다.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은 기획 기사를 통해 정책검증에 힘을 쏟았지만, 경남일보와 경남매일은 정책보도 자체가 적었다.

경남일보는 항공우주청 설립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책 보도 주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항공우주

청 설립을 놓고 양대정당의 정책 대결구도를 만들어 보도하기도 했다. 대부분 정책을 단순 나열하거나 ‘경남 지역 특정 지역에 공약을 바란다’ 식의 보도가 대체적으로 많았다.

경남도민일보는 다양한 정책을 보도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공약에 대해 가장 많은 보도양을 보였다. 환경 정책부터 체육 정책까지 다양성이 돋보였다. 4대 정당 외 선거 출마 경력이 많은 진보당의 정책도 함께 비교·분석하고, 주요 군소정당의 정책 기획 기사를 보도하는 등 소수정당 후보를 소외시키지 않으려 했다.

또 경남도민일보는 후보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2월 22일 <경남 원전업체 257곳 도산? 윤석열 주장은 '허위'> 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난 19일 창원 유세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제시한 주장들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주요 발언에 대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검증된 자료와 시민사회 의견을 통해 팩트체크를 시도했다.

경남신문은 지역균형발전 공약, 원전 정책,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 정책 보도가 가장 많았다. ‘경남민심 들어보니’ 기획 기사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했다. 또, 경남신문은 ‘3.9 대통령선거 특별취재본부와 선거보도자문단’을 2월 15일 발족하고 ‘창간 76주년 대선후보 공약비교’를 보도했다. 문화예술, 지역균형발전, 경제 및 일자리, 노동, 여성, 부동산, 복지, 환경 정책을 4대 정당 후보별로 분석하고 선거보도자문단이 검증하는 형식으로 보도했다.

경남의 정책보도는 언론사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정책보도는 유권자의 초점에 맞춰 친절하고 자세한 보도가 필요하다. 대결구도나 정치혐오성 프레임으로 정책의 중요성보다 정치적 이권 싸움으로 몰아붙일수록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임명장 무단 배포 관련 선관위 법해석 논란 보도하지 않은 언론은?

선거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선거와 투표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법 해석이 없는지 잘 감시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관행인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배포 사례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모니터 기간 경남도민일보에서 임명장 무단 배포와 관련된 기사를 연속 보도했다. 특히 일반 유권자에게 문자로 윤석열 후보 직인이 찍힌 전자 임명장을 받은 사례를 밝혀냈다. 임명장 무단 배포에 대해 경남도선관위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개인정보 도용은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논란이 된 사실을 알렸다.

또 경남도민일보는 만평을 통해 “선거법 93조 3항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장을 줬을 때는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건은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목적과는 거리감이 있다.”, “(임명장에 찍힌 선거 조직은)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임명장을 받았다고 해서 선거운동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선관위의 해석을 풍자하기도 했다.



그림 13. 2월 9일 경남도민일보 5면 만평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또, 임명장 무단 배포와 관련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사례를 들어 법 해석과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경기도의원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인이 찍힌 임명장 367장을 경로당 14곳에 무단으로 비치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해당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며 “해당 의원이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 임명장 배포 규모가 컸던 점 등도 고려해야겠지만, 법원은 당사자 동의 없는 임명장 남발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임명장 무단 배포 선관위 판단에 대해 KBS창원, KNN은 보도가 없었고, 경남신문과 경남일보, 경남매일은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만 취급했다. 임명장 무단 배포 사건은 유권자의 개인정보까지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히 취급할 사항이 아니었다.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맞는

지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경남도민 일보가 유일했다.

〈관련기사〉

MBC경남 2월 14일 리포트 <"민주당 당직자에게까지"... 국민의힘 임명장 남발>
경남신문 2월 15일 4면 <민주당원 "원치 않는 '윤석열 임명장' 반납">
경남도민일보 2월 9일 5면 만평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경남도민일보 2월 9일 1면 <일방적 정당 임명장에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경남도민일보 2월 10일 사설 <객관성을 스스로 무시하는 선관위 태도>
경남도민일보 2월 10일 1면 <일방적 정당 특보 임명장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
경남도민일보 2월 11일 <'묻지마 임명장' 중도층 표심 노린 낙시질?>
경남도민일보 2월 15일 8면 <"윤석열 임명장 살포, 유권자 표 매수">
경남도민일보 2월 15일 13면 칼럼 <임명장 스토킹>
경남도민일보 2월 15일 13면 칼럼 <중앙선관위가 빛은 '의아'>
경남일보 2월 11일 4면 <국힘, 대선 후보 명의 임명장 난발 논란>
경남매일 2월 11일 4면 <민주당 당직자에 임명장 발송 논란>

■ 민주당 텃밭, 보수의 심장, 여전한 지역주의조장보도

‘민주당 텃밭인 호남’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제주’, “보수의 심장(TK)과 텃밭(PK)”, “PK지역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전략” 등 지역 연고 정당에 대해 강조했다. 특정 지역 지지세의 근거로 지역의 지난 선거 결과를 내놓았다.

2월 7일 경남신문 1면 <초박빙 판세... 李 영남·尹 호남 '취약지 공략' 승부수> 기사에서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제주’, ‘민주당 텃밭인 호남’ 등 지역주의를 강조했다. 또 2월 9일 경남신문 4면 <여야 대선 후보 앞다퉈 '노무현 향수' 자극>에서 ‘노무현 향수’라는 표현을 제목에 붙였다. 내용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하고 나서 나름의 ‘득표 셈법’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며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소 참배는 정파를 떠나 여야 대선후보에겐 ‘필수 일정’이 됐다”고 했다. “PK지역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전략” “친노, 친문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 “노 전 대통령과 지역연고와 인연을 강조했다” 등 후보들이 지역적 연고와 향수를 자극하며 지역주의적 표현을 대거 사용했다. 2월 9일 경남도민일보 4면 <‘노무현 고향’ 민주당 강세 지역 현직에 도전하는 공천경쟁 가열>에서도 지역 연고를 강조하며 지역주의적 표현을 사용했다. 2월 8일 경남매일 2면 <TK가 PK보다 더 친국민의힘으로 흐른다>기사는 “보수의 심장(TK)과 텃밭(PK)” 등 지역주의적 표현과 함께 “TK가 PK에 비해 친(親)국민의힘 경향을 더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특정 정당에 편향된 보도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지역 연고를 강조해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는 표현은 언론의 구시대적 보도관행으로 남아있다. 후보의 발언에서 지역 연고를 강조했다면, 이는 지역 정서를 부추길 수 있기에 오히려 그 발언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기사〉

경남도민일보 2월 9일 4면 〈'노무현 고향' 민주당 강세 지역 현직에 도전하는 공천경쟁 가열〉

경남도민일보 2월 25일 5면 〈윤석열 “자유민주 동의하면 정파 무관 전부 통합”〉

경남매일 2월 8일 2면 〈TK가 PK보다 더 친국민의힘으로 흐른다〉

경남매일 2월 14일 9면 칼럼 〈메가시티에 도민은 없다〉

경남신문 2월 7일 1면 〈초박빙 판세... 李 영남·尹 호남 '취약지 공략' 승부수〉

경남신문 2월 9일 4면 〈여야 대선 후보 앞다퉀 '노무현 향수' 자극〉

경남신문 2월 24일 1면 〈李·尹 '영호남 텃밭' 허물고 목표 달성할까〉

경남신문 2월 25일 4면 〈도내 지선 예비후보 등록, 민주당 집권 지역에 쏠려〉

경남신문 2월 28일 4면 〈민주 텃밭 '샤이 이재명' 결집 기대〉

경남신문 2월 28일 1면 〈李 호남·尹 영남 '강세'...경기·인천·강원·충청·제주 '박빙'〉

경남일보 2월 22일 3면 〈李 '수도권·중도층 구애'...尹 '호남 민심 잡기'〉

■ 유권자 의제를 발굴한 좋은 보도

2월 7일 경남도민일보 1면 <유권자가 바라는 대통령은 □이다> 기사에서 유권자가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 다섯 글자로 정리해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1월 25일부터 28일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했다. 진주, 창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김해, 부산, 사천 충북, 강원,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설문을 응했고, 창원지역 유권자가 가장 많았다. 유권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통령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국민들이 제시하는 후보 자질에 대한 의제는 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생각을 잘 보여주었다.

유권자가 바라는 대통령은 □이다

본보 온라인 설문조사했다니
정의·실천·포용 능력 등 강조
경제 활성화·차별 해소 요구도

유권자는 어떤 대통령을 원할까. 대통령으로서 자질? 정책 수행 능력? 문제 해결사? 경남도민일보가 준비한 질문은 단 하나, '나의 대통령'을 다섯 글자로 정리해 달라고 했다. 지난 1월 25~28일 진행된 온라인 설문에 개인정보를 밝힌 62명이 의미 있는 답을 남겼다.

◇기대하는 자질 = 허연지(50·경북) 씨 답은 '정의로운 자'이다. "상식·보편·정의가 생각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우기(56·진주) 씨가 말하는 '무지개 다리'에 담긴 뜻은 뭘까. 지역·세대·진영 등 사회 갈등 요인이 모두 어우러져 건너는 다리다. 바로 대통령이 짚어줘야 할 역할이다.

최명(50·창원) 씨는 정치공학적 계산보다 국민 삶을 실제 개선하는 대통령을 바라며 '실용주의자'라고 답했다. 강정철(69·창원) 씨는 공약을 확실하게 실행하는 대통령을이라며 '실천적

질은 소박하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며 '재발 정상인'이라고 답했다. '정상 대통령'이라고 쓴 이한수(34·서울) 씨 생각도 같은 맥락이다. 최정휘(48·부산) 씨는 서민 삶에 '눈 감지 않는' 모두를 위한 대통령을 기대했다.

생각이 다른 사람도 접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박유신(39·대전) 씨는 '포용하는 자'에 답했다. 조복현(45·창원) 씨가 요구하는 자질은 '소통 전문가'이다. '갈등 조정자'를 기대하는 김명래(43·인천) 씨 생각도 비슷하다. "상대 진영과도 설득하고 타협하는 대통령이나오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어떤 리더가 돼야 할까. 정소영(36·창원) 씨는 '모두의 리더', 서인규 씨는 '희생의 리더'를 주문했다. 노치환(51·창원) 씨에게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나라지킴이'이다.

◇해결사 대통령 = 국가 최고 권력을 내 문제 해결에 썼으면 하는 바람이 유별난 것일 리 없다. 김남영(42·합천) 씨는 '날 위한 사람'으로 정리했다. '고충 처리인'이라고 답한 김다솜(31·창원) 씨 생각도 비슷하다. 진정화(48·창

안은미(48·서울) 씨는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평등해지는 세상을 꿈꾼다"며 '보편적 복지'를 제시했다. 허태은(26·사천) 씨는 "누구나 정직하게 일하면 먹고살 만한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며 '정직한 사회'라고 했다.

◇약자에게 힘이 되는 = 노동자 의

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밀고 갈 정도 배포가 있어야 한다"며 '페미니스트'라고 답했다.

공정·공평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는 성영섭(42·강원) 씨에게 대통령은 '특권 제거자'이다.

◇기타 = 남기열(50·창원) 씨가 쓴

씨도 마찬가지다. "도저히 못 짝겠다"며 '서술형 문제'라고 했다.

잘 뽑은 대통령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이상식(43·창원) 씨는 '현실적 내 삶'이라고 했다. 김남숙(52·창원) 씨는 늘 따뜻하게 받아주고 안식이 되는 대통령을이라며 '또 하나의 집'

그림3. 2월 7일, 경남도민일보 1면 <유권자가 바라는 대통령은 □이다>

이 기사의 보도 기사는 2월 10일 기자칼럼을 통해 "상대 후보를 거꾸러트릴 네거티브 한 방도, 저마다 만들겠다고 설치는 프레임도, 진영이나 소속도, 지라시·커뮤니티 같은 것도 잠시 잊었으면 했다"며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나의 대통령을 다섯 글자로 정리해 이유와 함께 보내달라는 온라인 설문에 62명이 참여했다"며 "기권하려다가 설문에 참여하면서 후보 정책을 다시 꼼꼼하게 보게 됐다는 한 응답자 인터뷰는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통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돕고 지역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이 같은 유권자 설문조사 보도는 뉴미디어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를 참여시켜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보의 자질에 대해 발굴하고, 지역 현안이나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거보도이다. 지금까지의 레거시 미디어의 선거 보도관행을 벗어나 국민과 언론이 함께 만드는 '국민 저널리즘'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보도이다.

유권자의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선거보도를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보도는 정치권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어 언론에서 유권자의 의견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 결론

이번 모니터 기간 쏟아지는 지역언론 보도에 집중하느라 정책의 본질적인 검토는 미비했다. 하지만 언론사별로 지역공약을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유권자 중심 정책 의제를 전달했는지는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언론사별로 선거보도의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기존의 선거보도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 검증 없이 정치권 중심으로 보도하는 현상을 드러낸 측면도 있었고, 취재를 통해 후보자의 지역공약에 대한 팩트체크를 시도했고,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군소정당 후보의 정책을 소개하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때 연속보도를 통해 공론화 시켜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도 했다. 이는 언론사의 취재 능력과 여력, 이슈화 능력,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언론의 창의적인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